

혜를 받았으며 신문용지에 대한 수입관세에서도 신문들은 일반 수입관세 30% 대신에 4.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저리의 차관도입이라는 특혜까지 누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1968년 박정권이 베푼 특혜에 힘입어 신문사 건물과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7-8%에 불과한 4천만불의 일본 상업차관을 들여왔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는가? 조선일보는 3선을 향한 박정희의 정치야욕에 편승하여 대대적인 3선개헌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캠페인에 앞장섰다.

이렇게 차관 특혜를 받아 시작한 코리아나호텔은 1972년 완공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국 관광객이 적어 객실이 텅텅 빌 수밖에 없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또 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구책을 마련했다. 당시 본점 신축을 추진중이던 주택은행의 계획을 취소하고 코리아나 호텔에 입주시킨 것이다. 대지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이 건물만 주택은행에 매각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조선일보는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유신찬양에 광적으로 매달렸다. 역사의 기록을 위해 조선일보의 유신찬양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그 광신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 또한 “헌법 기능의 일부 정지와 아울러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 질서의 존립을 위하여 만부득한 조치”라고 했으며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탈각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1972년 10월 28일자, 「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 중에서)

2. 도덕성문제 : 문란했던 박정희의 여성편력, 도덕적 이중성

최고 권력자는 실제 모습과 관계없이 온갖 포장을 둘러쓴 채 만인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겸소함에 대한 박정희에 대한 신화는 그러한 포장이 빚어낸 결과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론의 사정권을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술한 곳에서 인간 박정희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궁정도 안가일 것이다.

1) 3공의 요화 정인숙 사건

본명 정금지(鄭金枝), 자유당 시절 대구부시장을 지낸 공직자의 딸. 대구 신명여고 졸업 후 문리사대(명지대) 중퇴. 1970년 3월 17일 밤 11시경 정인숙은 오빠 정종욱의 총에 맞아 한강변에서 숨졌다. 당시 정인숙의 수첩에 기록된 전현직 고관 및 재계인사는 20여명이 넘었고 정인숙이

남긴 3살박이 사내애가 대통령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다. 이 사건은 결국 김계원 중앙정보부 부장이 직접 나서기까지 하여 사건을 무마하였지만 당시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의 가사가 바뀌어 '박의 소생'이라는 노래로 퍼질 만큼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육영수 여사는 어디서인지 변조된 가사 전문을 입수, 박정희에게 들이대며 따졌다고 한다. (김정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

2) 궁정도 안가

이렇게 사건화된 여인관계 말고도 박정희대통령의 여자관계는 매우 복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통령의 사생활을 관리한 박선호(예비역대령, 중정 의전과장)는 10·26으로 박정희시대가 막을 내린 80년 1월 25일 육군고등군법회의 증언에서 “궁정도 안가에 박대통령은 한달이면 열번이나 그곳에 왔다” 말했다.

박선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집은 암살사건으로부터 10년전인 60년대말 이후락(6대 중정부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안가로 사용되었다.

“박대통령은 궁정도 안가를 만들기 전에는 위장번호를 단 승용차로 밤나들이를 하곤 하였다. 당시에는 박종규만이 야행시간과 장소를 아는 '친기'에 속했다. 육여사는 별도의 정보망으로 야행을 감시, 꼬투리가 잡히면 박경호실장에게 따지고 심한 부부싸움을 하곤했다. 그러나 모두가 못 본 체 모른 체 하고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박대통령은 스태미나가 절륜했고 상대는 두세차례 만난 뒤 꼭 바꾸었다. 그래서 교유 여배우 숫자가 많아지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10·26 당시 박선호(중정 의전과장)의 법정 최후 진술)

100여명에 가까운 연예인이 이곳을 다녀갔다. 세검정에도 비슷한 안가가 있었으나 청와대와의 거리가 멀어 궁정동이 주로 쓰였다. 잡지나 TV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궁정동에서 가까운 내자호텔로 불렀다. 부르는 과정에 회유도 압력도 있었다. 예컨대 79년 10·26 당일 오후 5시 20분 가수 심수봉은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대학생 모델 신양은 프라자 호텔에서 각각 궁정동으로 인도됐다.

박정희의 문란한 여성편력은 육영수여사의 사후 한층 더 심해졌다. 궁정도 안가에서는 사흘에 한번 꼴로 '대행사', '소행사'로 불리는 미녀파티가 열렸고 측근들 사이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경쟁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박정희의 여성관은 당시 고위층들의 입에서 흔히 오르내리던 '배꼽 아래 인격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5. 박정희와 노동자·민중수탈

박정희의 민중탄압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NGO 학과 교수

1. 머리말

박정권 시기는 '국가'가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공적 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국민'을 얼마나 장기판의 졸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 인간을 야만으로 몰아넣은 일들이 얼마나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굴해질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인간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지, 사람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신과 의혹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시기였다. 20세기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박정권 시절에 톡톡하게 체험하였다. 그러한 국가폭력으로서 '근대화'의 경험은 민주화를 위한 한 과정으로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회 체제, 나아가 경제질서에 내재화되어 지금의 삶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문명 개척을 발목잡고 있다.

다행히 독일은 미국의 압력 하에서 철저한 전후 청산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문명을 야만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을 처벌하였으며, 야만적인 상황을 방조한 '집단 사회심리'를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권 붕괴 이후 더 억압적인 군사통치를 겪었고, 문민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미 30여년 동안 우리사회에 착근한 군부-정치집단 - 재벌 - 언론의 유착체제가 더 이상 건드리기 어려운 정도로 사회 각 영역에 고착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70년대의 비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박정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청산 작업의 결여는 지금 한국사회의 건강성의 회복은 물론, 경제 민주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 나아가 통일된 남북한 공동체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2. 민중탄압의 실상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권은 '생산적인 정치'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가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조성, 부질없는 상쟁과 분열의 억제, 정치의 안정, 조용하고 깨끗한 직접, 혹은 간접 선거, 국가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격의없는 협조를 강조하였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국가목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국민의 동의의 기반을 넓히는 일에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지상 목표 즉 '총력' 안보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갈등' '시민사회 내의 갈등'이 억제되어야 하며, 정당과 시민사회는 바로 국가 목표 수행을 위한 전달벨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파시즘의 논리인 것이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한 동원과 갈등의 억제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법제화된 것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기 위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과 유신 이후 발표된 긴급조치였다. 긴급조치는 74년 1월 8일 제1호가 선포된 이래 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유신시절을 상징하는 통제체제였다. 72년 12월 27일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투표로 가결된 유신헌법은 제53조에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규정하였는데, 천재지변이나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신 하의 긴급조치는 사후적 비상조치 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비상조치권의 내용 범위가 지극히 광범위하며 국회의 집회나 소집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으며 국회나 법원의 통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대통령을 전제 군주와 같은 지위로 격상시키는 초헌법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효율성'이라는 논리에 기초해 있었다.

긴급조치 하에서 메카시즘적 좌익 사냥이 부활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관제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초헌법적인 기구인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무자비한 고문이 가해졌다. 1974년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박정권은 오직 무자비한 고문으로 관련자들의 날인을 받아낸 것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재판진행, 공판기록 변조까지 자행한 끝에 재판 1일 후에 관련자들을 처형하였다. 한편 이 시기 대전, 광주를 비롯한 사상관련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사상 전향공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 백여명의 수감자들이 고문, 치사하였다. "마르크스가 꽃을 꽃이라 해서 내가 꽃을 꽃이라고 한다면 내가 곧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긴급조치 하에서 정부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은 곧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사건을 거론하는 것을 기피하였으며, 이 모든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국가는 시민사회를 완전히 흡수하여, 일사불란한 국가동원체제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사회는 군대의 모델을 사회 전 영역에 확산시킨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대민 통제, 사회의 군사화, 사회조직의 군대조직화는 한국의 맥락에서는 일제 식민지 유산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한다. 농촌사회와 기업 및 학교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당시 농촌은 수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행정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았으

며 단체의 장은 말단 행정기관의 꼬나풀이었다. 노금노는 1973년 봄 자신이 맡고 있었던 직책을 열거하였는데, 마을금고 회계, 50여호를 대표하는 수반장, 새마을 사업 추진위원, 새마을 지도자, 마을 협동 회장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농협 총대, 연연초 조합 총대, 농지위원, 지도소 자원 지도자, 4H 독농가, 시범농가, 산림계장, 이장, 민방위 대장, 예비군 소대장, 절미저축부인회, 명예반장, 명예파출소장, 정당의 책임자, 반공연맹 책임자 등의 직책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걸핏하면 무슨 교육이다 동원해가지고 높은 양반들처럼 일장 혼시 하는데 댓가지 숫자 채워주는 것이 고작이고, 새마을 회관에 가서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을 외치고, 새마을 사업 역시 마을 민의 자발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찍히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즉 새마을 운동은 자발성의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반강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강제적 지붕개량 사업은 시멘트 업계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명령 일변도의 행정은 유신 체제 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국가시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었고, 새마을 운동은 '유신의 실천도장'으로 강조되었다. 새마을 운동의 추진기구는 중앙협의회부터 마을단위의 리동개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농민의 자주적인 운동이었다기 보다는 중앙의 계획과 지시가 마을단위 농가에까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이었다. 그것은 일사불란한 국가동원의 상징이었다.

조직의 목적상 합리적 사회관계가 지배하는 기업과 달리 학교는 더욱 더 군사주의적이었다. 학생들은 교련복을 착용하여, 군대식 사열과 군사훈련을 반복하였으며, 아침조회, 학교장 혹은 교육관료와 학생의 관계, 학교 내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상급학생과 저학년 학생과의 관계는 모두가 군대식 규율로 움직였다.

언론 역시 통치기구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의 정간, 휴간, 폐간, 기자의 구속, 연행, 테러 등의 물리적인 통제의 방법이 동원되었으나, 70년대 들어서는 보다 확실하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 지침을 하달하고, 언론인 출신들을 정치권으로 발탁하는 한편, 경영진과 편집진을 체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75년 동아일보의 '자유언론실천' 운동은 언론이 국가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이후 70년대 후반기는 언론이 완전히 국가의 홍보기구화 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뉴스, 홍보, 토론과 같은 직접 전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드라마, 쇼, 스포츠, 코미디 등 오락 연예 부분에서도 안보국가의 목표가 시달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도시 개발과 도시 미관을 빌미로 하여 판자촌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에는 광대한 무허가 정착촌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주 농민들이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주택 시설을 마련해주거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는 커녕 일방적인 철거작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무리한 철거작업은 '무등산 타잔사건'과 같은 항의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작업장에서는 노동과정과 목표에 대한 완전한 순종, 노동시간의 극대화 등으로 집약되는 '유혈적 테일러리즘'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하게 성장한 조립 가공산업은 '선진' 경영기업을 학습하여 '봉건'과 '근대'가 결합된 최고도의 노동착취를 시행하였다. 능률주의의 명분으로 실시되는 도급제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노동강도를 높여 놓았다. 그리고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공정단가를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임금은 외양으로 본다면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측에서 임금 외의 비용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삭제한 다음 계산한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는 착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킨다는 논리는 어떤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과정에서의 비인간적인 감시,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 노동 외의 시간에 대한 인신적인 통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조건에서 합리성이이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였다. 버스안내양 자살 사건 등 비인간적인 노동통제를 견디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항의가 발생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70년대 중반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당 52.6시간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11시간 이상이 높았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0.46달러)도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4.97달러), 미국(4.8달러), 일본(3.21달러) 등 여러 나라에 비해 9.2%에서 19%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78.8%가 근로소득세 면제점 이하인 월 4만 5천원 미만의 소득이었고 전체 노동자의 74.9%가 3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황에 있었다. 구로지역의 경우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봉급이 제일 많았고, 심지어는 2만 5천원 전후도 적지 않았다. 생계비에 미달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월급으로 생활비가 모자라 시골에서 빚을 얻어와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생명과 맞바꾸는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 76년 한해 동안 산업재해의 총발생건수는 9,665건이었고 이 중 사망이 909건, 부상이 96,390 건, 그리고 63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통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노동청의 행정지도 감독이 미칠 수 있는 16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산업재해의 발생은 이보다 후훗씬 심각하였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중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였다. 광산지역에서는 사망자의 58.3%가 낙반 및 붕괴사고 였는데 낙후된 작업조건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부들이 흔히 폐결핵이나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당장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제 노동자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짐승으로 그리고 상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바꾸는 것 보다 노동력을 헐값에 대치하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이 자리잡았다. 노동자들은 달면 씹고 쓰면 뱉는 철저한 계산주의 사회 그 세찬 사회 속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농촌과 도시의 소득의 격차는 더욱 증대하였다. 농가 가구당 실질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의 70.6에 불과하였다. 농가 인구 1인당 실질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4.2%에 불과하였다.

특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시와의 내왕이 쉬워지고 TV의 보급으로 농민들은 도시의 생활을 보다 가까이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장차 농민의 생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돈벌이의 전망이 어두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5. 맺음말

박정희식 근대화는 군사주의, 파시즘적 국가주의로 나타났다. 그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절대절명의 가치 아래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는 체제였다. '성장'의 담론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담론이자 동시에, 국가의 무제한적인 동원과 반인권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파시즘의 논리이기도 하다. '성장'의 담론은 국민들에게 권력에 복종하되 오로지 생업만을 도모하라고 유도하는 사회 체제였다. 그것은 겉으로는 규율이 있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적나라하고 사회 파괴적인 이기심만이 작동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국가와 정부 대통령과 지도층을 진정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오직 자신에게 단기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세력에 편승한다. 만약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들의 이기심을 계속 충족되고 있다면 그것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적 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대단히 무책임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할 것이고 사회에 거세게 항의할 것이다. 그것은 군사독재, 성장지상주의의 자기파괴이자 사회의 붕괴인 것이다.

박정권 시절은 인간을 자본의 노예, 관료조직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비인간화된 체제였다. 능률주의, 성과주의, 실용주의는 이러한 자본/국가의 결합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곤궁한 생활을 면하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탈빈곤'의 열망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려는가 하는 것은 기존의 정치경제질서와 사회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놓은 통로 위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공정한 경쟁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권력의 부재,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질서가 당시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에도 연결되는 6, 70년대의 한국식 자본주의의 사회적 기초였다.

셋

박정희 관련 자료 모음



박정희 흉상철거로 구속수감된 김용삼 위원장
(인터뷰 내용은 본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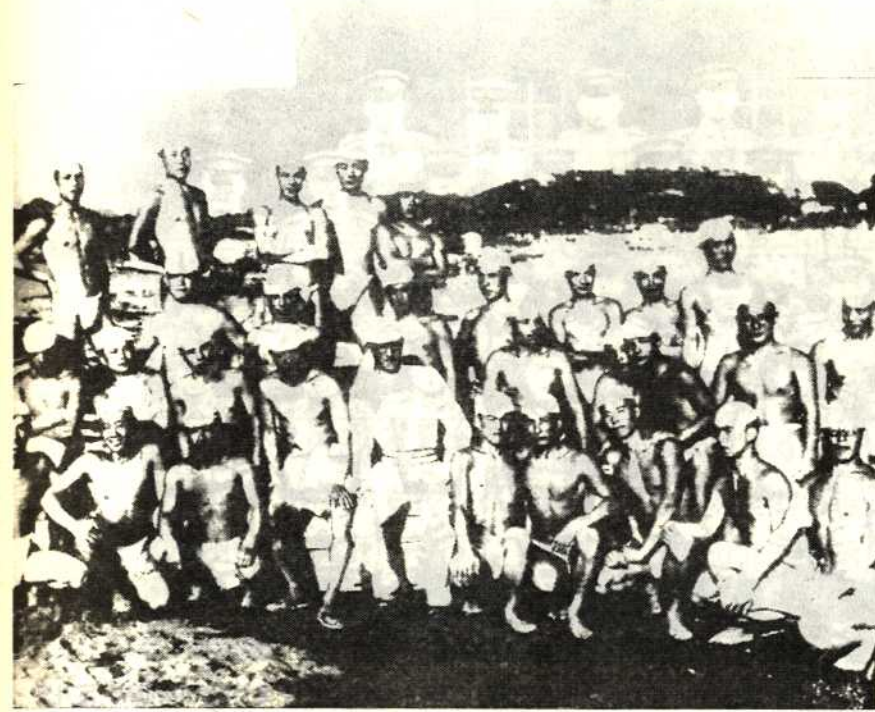
1. 박정희 연표
2. 사진 및 자료 모음
3. 관련 기사 모음

박정희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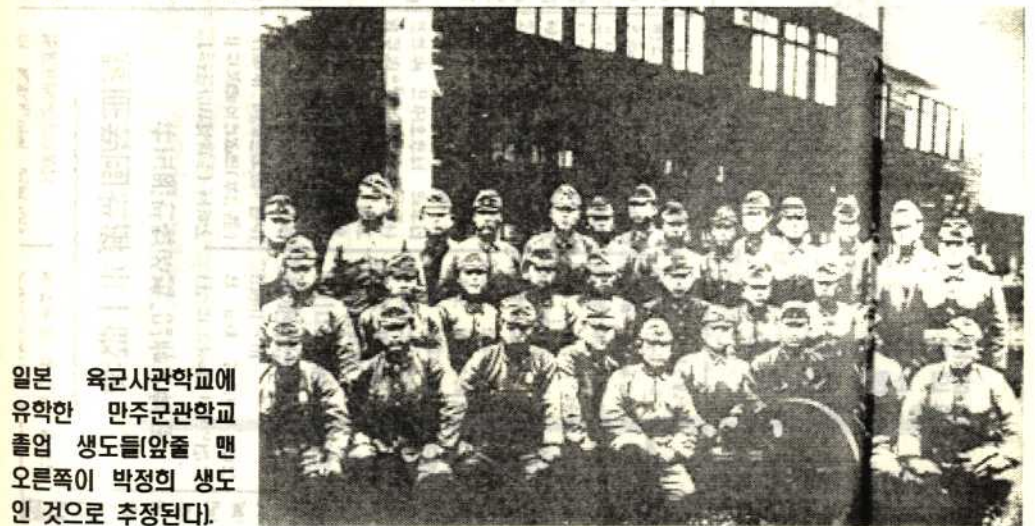
-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 출생
- 1924년 4월 구미 보통학교 입학
- 1932년 4월 1일 대구사범학교 입학
- 1937년 3월 대구사범졸업, 문경보통학교 교사
- 1941년 4월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
- 1942년 3월 만주군관학교 예과 졸업. 졸업생대표로 답사. 만주국 괴뢰 부의로부터 금시계를 받음
- 1944년 7월 만주군 보병 제8단에 소위로 배치되어 팔로군과 독립군을 토벌
-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전신) 2기생으로 입학
- 1946년 12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춘천 제8연대에 소위로 임관
- 1947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 부임
- 1948년 11월 11일 여순봉기 이후 숙군작업을 벌이던 군수사당국에 의해 체포
- 1949년 2월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동료들을 폭로하고 석방
- 1950년 10월 25일 한국전쟁발발후 육군 9사단 참모장으로 복귀
- 1951년 12월 10일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차장으로 발령
- 1959년 7월 제6관구 사령관
- 1960년 1월 부산군수기지 사령관
- 1960년 12월 제2군 부사령관
-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 1961년 7월 3일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반혁명사건'으로 체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 1963년 2월 27일 민정불참선언
- 1963년 3월 16일 군정4년 연장가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발표

- 1963년 8월 30일 민정참여를 위한 의식의 하나로 중부전선 제5군단 기지에서 예편식
- 1963년 9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보선이 '사상논쟁'제기. 12월 황태성 제거.
- 1963년 10월 15일 15만표로 윤보선을 제치고 대통령 당선
- 1964년 6월 3일 6·3한일회담 반대시위, 비상계엄령선포
- 1964년 8월 14일 6·3시위의 배후조정으로 '인혁당사건' 발표
- 1965년 1월 8일 베트남에 파병 결정
- 1969년 9월 3선개헌안 통과
-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제 선포, 비상계엄령 선포, 영구집권 획책
-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표
-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발표, 민청학련·2차인혁당사건 조작, 탄압
- 1975년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함으로써 인권탄압을 본격화
- 1979년 8월 11일 YH노조 신민당사 점거농성
- 1979년 10월 17일 부마항쟁 발생
-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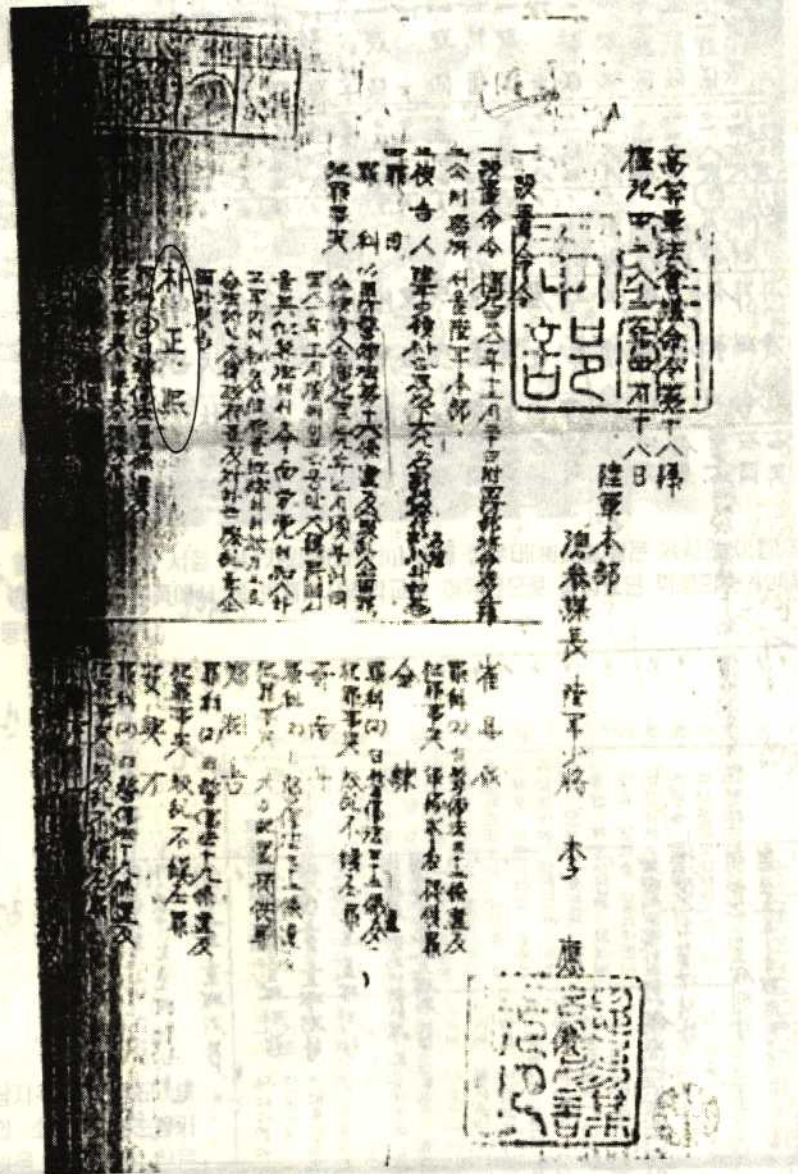
사진 및 자료모음



일본 육사 시절의 해양 훈련 기념사진(앞에서 두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박정희 생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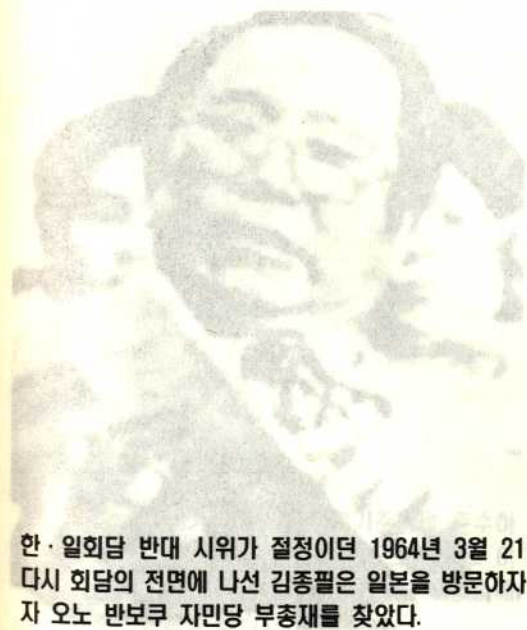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한 만주군관학교 졸업 생도들(앞줄 맨 오른쪽이 박정희 생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49년 1월 18일 고등군법회의의 박정희의 영면제 관련기록



1963년 9월 28일 황태성 사건을 보도한 신문. 황은 박정희의 영인 박상희와의 관계 때문에 세상의 이목을 모았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절정이던 1964년 3월 21일 다시 회담의 전면에 나선 김종필은 일본을 방문하자마자 오노 반보쿠 자민당 부총재를 찾았다.





그림 '코리아게이트'의 선물을 물고온 박동선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77년 6월 22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관련 사항을 증언하고 있다.



'박정권은 아아아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교문을 나서는 고대 구국투위 학생들(64년 6월 2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하다 분신한 전태일 군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2의 전태일사건 한영성유 종업원 김진수씨의 죽음. 기독교청년협의회원 등 150여명이 노조운동을 하다 숨진 김씨의 사인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시위했다.

《국민연대 활동사진》



2000년 9월 28일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결성식



결성식 후 명동성당 앞에서 행한 기자회견



2000년 10월 26일 서울시청 앞 집회



2000년 11월 9일 독립운동가 22인이 박정희 기념관 반대 선언을 하고 있다.



2000년 7월 31일 대구지역 단체들의 상경집회(서울역)



2000년 11월 24일 국회앞 집회



2000년 11월 14일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국민연대 상임대표들이 고건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박정희 기념관 상암동 부지 제공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충북역사정의실현협의회의 청주중앙공원에 세워진 '5·16 기념비를 철거하자'는 주장이 담긴 유인물. (1996년 3월)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 철거 사진모음》



2000년 11월 5일 일본군장교 출신인 박정희에게 일장기를 씌우고 힘을 모아 어-영차 하며 흉상을 끌어내리고 있다.

2000년 11월 5일 일본군장교 출신인 박정희에게 일장기를 씌우고 힘을 모아 어-영차 하며 흉상을 끌어내리고 있다.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며 그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국민연대 광태영 상임대표

11월13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면회했다. 초췌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건강은 어떤가?

“심장이 조금 좋지 않지만 견딜 만하다.”

적용된 혐의 내용이 뭔가?

“특수공무방해죄와 폭행죄다. 재물 손괴죄 정도로 생각했는데 뜻밖이다. 재판과정에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

언제 어떤 동기로 박정희 흉상을 철거할 마음을 먹었나?

“박정희의 가장 큰 죄는 민족을 배반한 죄다. 그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사람이다. 4·19혁명 후 '김구 선생 암살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암살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속속 자수하는 상황이었는데 5·16쿠데타가 진상규명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5·16은 또 4·19혁명의 영향으로 막 움트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렸다. 흉상을 철거하기로 맘먹은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쿠데타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대가 출범한 9월28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조직부장과 함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그에게 흉상을 철거해야겠다는 내 뜻을 밝혔다. 한 달 뒤 저녁 회식 후 방학진에게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는 단체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11월2일까지 4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구속을 각오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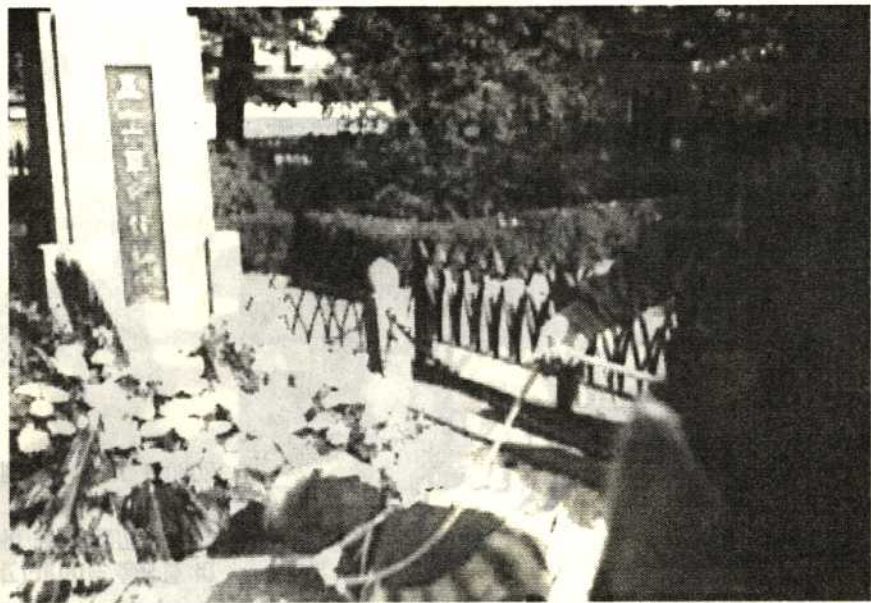
“역사적 정의 차원에서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정법에 저촉될 것은 각오했다.”

박정희 부활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

“친일파들이 박정희를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그의 범죄실상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다. 민족 반역자를 기리겠다고 국민의 돈을 쏟아 붓는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이 세계가 주목하는 장소에 반역의 바벨탑을 세우려 하다니. 이는 역사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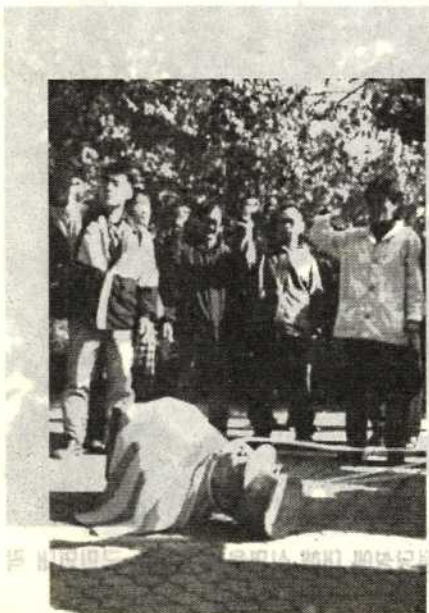
“누구보다도 김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이다. 역사의식이 올바른 분으로 믿었고, 통일지향적인 대북정책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통일정책은 국민이 적극 밀어줘야 한다. 그런데 친일을 한 박정희를,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보다 더 화려하게 기념하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박정희 기념관은 김대통령의 역사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는 대통령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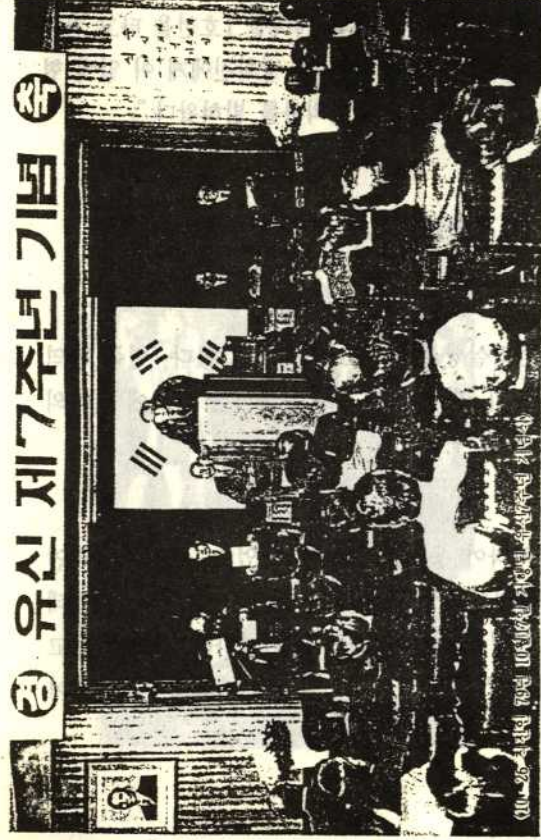
흉상 앞에는 누군가 헌화한 꽃들이 수북하다.



끌어내려진 박정희 흉상



경 유신 제7주년 기념 축



「12.12.10년, 兩金이 말하는 朴正熙·全斗煥」

그러나 歷史가 그들을

박정희 씨의 전두환씨 그리고 그 정권을 평가하기에는 나는 가장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항상 대결의 위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의 최대의 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김옥에 가두고, 기택에 연금시키고, 국외로 추방시키고, 몇 차례나 나의 목숨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10·26사태의 10주기를 맞이하여 박정희씨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터놓고 예찬을 하는 등, 이상한 부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박·전 두 전직대통령의 최대의 피해자의 한 사람인 내가 나의 생각을 감수없이 적어보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그들과의 투쟁한 관계로 엄정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계가 나에게 남의 다른 권력을

376...新東亞·1989·12

잡트의 「나세르」도 종신 소령으로 끝마쳤다. 같은 독재자들이지만 친이 남았다.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는 다같이 일관된 군사통치지였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군사통치하에서 잘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브라질과 같은 군부독재정권은 국가를 파탄의 위기로 몰아 넣은 후에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은 군부정권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패전을 하고 민간정부에게 정권을 넘겨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국가적 불행이 오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박정희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독재자인 전두환정권을 굴복시켜 민주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반민족적인 專大政權

박정희-전두환정권은 말로는 자주와 자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親日拜美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는 그들의 정권이 정통성과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필요로 한 결과였다 할 것이다. 그들의 이같은 친일배미정책은 한국경제를 미국과 일본에 예속케 하였으며,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미종속을 견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일본이 미국의 무역압박을 잘 막아내면서 실리를 취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굴복하는 사실은 이같은 대미 종속관계의 산물이다.

박·김의 역대 독재정권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경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미·일의 지원에 힘입어 반민주적 정치권력을 유지하려 해왔다. 반민족적인 시대의 정권들이었다.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는 정권유지를 위해 반공과 안보를 극도로 악용하였는데, 그 결과로 정부의 반공논리와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창하였다. 그들은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용공으로 몰아붙였 다. 이같은 매카시즘적 책대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위축시켰으며, 무고한 시민을 고문수사하여 간첩이나 용공분자로 조작해내는 안보정책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멸시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박·전 두 정권 이래서의 그러한 반공정책은 국민의 애국심을 동요케 하고 민주사회로서의 긍지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말할 수 있게 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이면 군대생활의 경험담을 주고 받느라고 시 간가는 것을 잊어버린다. 고생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지긋지긋하기도 했던 맑은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변할 수 있다. 과거는 쉽게 낭만화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은 인간에게 참으로 하나의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잊는 것이 지난날의 악을 미화하는 것과는 같을 수 없다. 우리는 박정희씨의 전두환씨를 용서해 주고, 그들이 준 고통을 잊어버리고 미래 를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냉철하게 기억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악인은 용서해도 악이 되풀이 되는 것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진진이 불가능해지고 제왕의 되풀이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이래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두 가지 형태의 독재 또는 준독재 치하에 있었다. 하나는 문민정 권의 권위주의적 준독재였고 또 하나는 군부강권통치의 독재였다. 주지하 다시피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은 군부강권통치를 지행했다. 그들이 지 지 른 독재는 그 본질이나 유형이나 결과나 모두 같은 것으로서 본질적인 차

斷罪할 것이다

金 大 中 (平和民主主義者)

이점은 물론 실질적인 차이점도 없는 동종의 독재정치였다. 따라서 그들을 한류음으로 해서 평가해도 좋을 듯 싶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를 비교하여 그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뒤 에, 비록 지역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들 사이의 차이점도 조명해 보고, 다 음에는 박정희 전두환 양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떠 한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는 다같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명의 희생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전 통치기간을 통해서 무자비한 탄압정치로 일관했다. 스스로 자기자신을 소장에서 대장까지 승진시켰다는 것까지 임치하다. 스스로 범을 저기 어깨에 더 붙인 것이 그리 대단한 것 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리비아의 「리비아」는 만년 대령으로 있으면서

그러나 歷史가 그들을 斷罪할 것이다...377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는 정경유착을 통해 이 나라에 권력의 독점세력과 경제력의 독점세력이 서로 떠받쳐 주는 기형적 독점자본주의를 창출해냈는데, 그 결과로 노동자와 농민의 명목적인 성장과 특권층의 탐욕적 치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독점자본주의경제가 자체내의 모순을 스스로 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러한 모순을 스스로 고치는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 달성되었으며 체제의 근본한 유지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이같은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원칙대로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정권, 朴정권의 夫패 계승

시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모순과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경제는 물론 정치적 불인의 만성화의 상태에 있다. 최근의 토지공개념에 관한 국민 여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기 위한 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에 안주하고 있는 권력독점세력과 경제독점세력은 개혁을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박정권과 전정권은 절대권력을 헌없이 행사했기 때문에 너무도 넓고 깊게 부패했었다. 그들의 부패는 앞 의 정경유착과도 깊어 관련되는 것이지만, 부패의 근본원인은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의 제대로 실시되는 나라에도 부패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 에는 부정부패가 극히 제한된 현상임에 반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정 권의 부정부패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 「레이건」 대통령 초기에 안보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리처드 알렌」은 단돈 1천달러를 인턴비 일신 수고비로 받았다고 해서 사표를 내야만 했다. 이를 수천여 또는 수조원을 운위하고 있는 5공비리에 비교해보면 어림이 소꿉장난 같다.

박정권의 부패도 얼마아마한 것이었지만 전두환정권이 계승했기 때문에 5공비리와 같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같이 친문학적 규모의 부 패가 한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절대권력에 의해 말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나라이건 민주주의의 지배가 한번 무너지면 일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여 그 패턴이 모든 분야로 만연되어 간다. 애초에 집권하는 방법이 불법적이었고 정권유지의 방법이 불법적이었던

88 박정권과 전정권하에서 정치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었고, 정 부의 부정과 부패에 동참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서 노릇을 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가치관이 혼돈되고 윤리 의식이 땅에 떨어졌다.

89 법과 원칙보다는 힘과 벽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에서 좁은 문을 뚫어 해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침으로 어려운 일이다. 양심수로 감옥생활을 했던 어느 목사의 밑에 의하면 감옥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강·질도 법이나 경제사범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진짜 큰 도둑들과 권력 의 남용자들이 활개치는 특권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죄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유지도구로 이용된 「통일」과 「지역감정」

정권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박정권과 전정권은 민족의 속 원인 통일도 그들의 정권유지도구로 악용했으며, 반면에 진정한 통일 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특히 박정희씨는 내가 1971년 대통령선거 때 3단계통일론을 제안하자, 나를 김일성의 장단에 춤을 춘다고 온갖 방법으로 매도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7·4공통성명문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마치 당장이라도 통일을 추진할 것인양 위장하면서 유신체제의 반통일 적 독재체제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통일을 악용하여 수된 유신체제는 사실상 전두환정권에 승계되어 말로는 통일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통일에 역행하는 분단체제의 고착 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러한 그들의 반민족적 책태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통일이 집권층의 정치도구가 되고 있으며, 국민대중에게는 두려운 금기사 상이 되고 있는 원인을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망국적인 지방색은 박정희씨의 철 저한 지방차별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전두환씨에 의해서 승계되었다. 박정 권 이전에는 전라도 출신 후보가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경상도 출신 후보가 전라도에서 당선되기도 했었다. 그것은 하 나의 평범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30년에 가까운 지방차별정책이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의 꿈이 되어버리고 상상조차 어렵게 되고 말았다. 나는 이러한 망국적인 지역차별정책을 시작한 박정희 씨야말로 이 나라 민족역사상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라 고 규탄하는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말해주고 있다. 결코 박씨 개인만의 공로라 할 수 없다.

이무튼 박정희씨는 저극적 사고방식의 고취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전두환씨는 무수한 「신어」만 남발했지 뚜렷하게 지적할만한 유산 은 하나도 없다. 그뿐인가, 무고한 광주시민의 학살과 수많은 민주인사의 고문과 투옥 그리고 엄청난 부정부패만을 남기고 물러났다.

박정희씨가 저지른 최대의 반민족적 죄악이 지역차별이었다면 전두환씨 의 최대의 반민족적 죄악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광주학살이었다. 박정희씨 의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조장이 민족역사에 영원히 남듯이 전두환씨의 친인 공노할 광주학살도 민족사에서 지워지지 못하고 영원히 남게 될 죄악이 될 것이다.

「박정희美化」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박정희씨와 전두환씨가 우리 사회에 끼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박정희씨에 대한 미화를 시도 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러한 엉뚱한 술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역사 와 국민은 다시 한번 독재자와 그들의 하수인을 단죄하고자 말 것이다. 하 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두 정권의 업적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만일에 그 들의 강압통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를 살펴 보 는 것이다.

박정희씨의 군부집단은 그들이 이미 자유당정권 때부터 계획했던 쿠데타 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4·19 이후의 혼란과 구정치의 부패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면내각이 출범한지 겨우 9개월에 과거의 부 패를 일소하는 일과 갑자기 얻은 자유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 혼란을 완전 히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를 강요하는 주장이었다.

90 장면정권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 인 정치를 했으며, 하려고 노력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만일에 박 정희·전두환 양씨의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30년의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자유가, 정의 롭고 민간주도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와 더불어, 이 땅을 동방의 서독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박정희정권이 시작한 제1차 5개년계획은, 실은 장면정권의 국토건설계획

인론인들을 이용 「軍憲政權」 형성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은 미래의 전체주의를 묘사하면서 거기를 참으로 만들고 참 을 거짓으로 선전하는 언론통제를 「신어(New speak)」라고 명명한 바 있 다. 박정권과 전정권은 지식인들 특히 언론인들을 이용하여 군사통치를 합 리화하고 유지하려 했다.

박·전 두 정권은 언론인들을 이용하여 軍憲政權을 형성했는데, 그 결과 군출신과 언론계출신이 국회와 정부와 여당에서 콤포비를 이루어 지배해왔 다. 대통령은 군출신이고 그의 보좌역들은 언론계출신, 총리는 군출신에 다수의 장관들은 언론계출신과 같은 형태가 집권층의 전형적 조직이며 여 권의 지도층과 국회에도 다수의 언론인이 군출신을 중심으로 진출했다. 이 리하여 언론계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져들어 갔으며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무서운 대중조작의 구조속에 서 국민은 위협받고 농락당했으며 수 없는 민주인사들이 매도되고 억울한 누명속에 매장되어 갔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정치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그들을 이겨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이들 독재자에 대항하는 과정 의 전투에서는 여러번 패배하였지만 마지막 승패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전쟁에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세계 도처에서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박정희씨와 전두환씨도 예 외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말로는 너무도 비참했고 치욕적인 것이었다. 이 두 독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국민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쳐 휘청거리다 한 사람은 자기 부하의 손에 죽고 한 사람은 산중절간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독재자들의 말로는 다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박정희씨와 전두환씨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통치기법이나 독재의 결과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들이 각기 처 한 역사적 배경과 개성의 차이가 약간의 외형적 차이를 보여주었을 뿐이 다.

박정희씨에 대해 인정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히든 핸드」는 저극적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고취시킨 사실이다. 흔히들 경제발전 그 자체를 박정희씨의 공로로 평가하지만, 같 은 시기에 대만과 싱가포르의 흥분이 유사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올린 것은 이 두 나라보다도 못했던 문화적 배경의 모순을 들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 이다.

91 을 제포장한 것이었음을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재정 권이 경제면에 끼친 악영향, 예를 들어 무리하게 물리적 힘으로 추진한 중 화화공업 등의 부실화와 낭비와 혼란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아래서 보다 더 진전한 산업구조와 보다 더 정의로운 자유경제체제를 이룩 하여 오늘날과 같은 계층간, 지역간 그리고 노동간의 갈등이 없는 건전한 국민경제를 이룩했을 것이다.

유신과 5공체제에 종지부 찍어야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언론자유와 지방자치와 사법부의 독립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린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면정권에 의해서 그 올바른 기초 가 세워진 것들이었다. 요즈음의 언론은 그 당시보다도 자율적이지 못하고 박정희씨가 폐지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정치발전에 치 명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아직 권력의 지배권을 완 전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2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서독 못지 않은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독재자들의 책임이었다. 만일 군사통치가 없었고 그대로 민주 체제가 지속되었던들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제2의 동독으로 변화시킬 수 있 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3 작금의 국제정세는 날만 세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급변과 격동을 거 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에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조차 국민이 자유를 되찾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북한이나 중국 에서처럼 이를 역행하는 것은 일시적 예외현상 밖에 안될 것이다.

94 이제 20세기 최종의 10년은 민중해방의 시대가 될 것이다. 민중해방은 정치적 질곡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는 해방과 빈곤의 압박으로부터 풀려나 는 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완전한 것이 된다. 소련이나 폴란드 헝가리 등은 자유도 없고 빵도 없는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동독은 빵은 있어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박·전 양씨의 실패에서 배우고 공산주의자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서독이나 일본 등 서구 민주국가들의 성공의 사례에서 적극적 모범을 배우고 세출발을 해야 한다.

95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의 90년대를 열려면 박정 회·전두환 두 정권의 유신과 5공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에 의해서 좌우되는 민주주의의 화림을 위해 일로 매진해야 한다. 그 것만이 우리의 내일을 밝게 만들 것이다. 96

17년간 잘못된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육영수 저격사건으로 파면되어 소송제기한 중부경찰서 경찰관, 사장의 증언과 각종 공판기록 최초 공개



행정고시를 통과, 30대 초반의 서장으로 각광받았던 김원모씨는 문세광사건으로 자신의 꿈을 잃고 말았다

사건 전 경호실 직원과 문세광은 아는 사이였다

문세광사건으로 인해 사장 이하 26명 파면이라는 '줄초상'을 당한 중부경찰서. 당시 파면되었던 사람들이 17년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문세광이 무사히 식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까닭과 문세광과 경호실의 관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정내에서의 수수께끼, 단상으로 뛰어오른 인물의 정체 등 이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당시의 의문점들을 밝힌다 □ 취재/김인수기자 □ 사진/박성연·이찬우기자

문세광·경호실 아는 사이였다 323

2차 관계관회의에서 중부서장과 경호실 관계자 입씨름 벌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의 역할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1974년 8월 15일의 '문세광사건'. 대통령의 부인이 피살당한 만큼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고 이에 따라 책임자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책이 뒤따랐다.

그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중부경찰서. 사건 현장인 국립극장의 관할 경찰서이자 당시 그곳의 경비를 맡았던 중부경찰서에서는 사장을 비롯, 정보과장, 경비과장 등 모두 26명이 파면처분되었고 이중 최중환 정보과장은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때 파면당했던 인원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호소하며 17년만에 당시의 정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세광사건으로 파면된 중부서 경찰관은 모두 26명. 이중 15명이 당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부인이 살해된 충격적 사건이라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16일 아침 경호실에 불러 올라갔는데 미리 써놓은 진술서 초안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두차례 더 경호실에 불려가 협박을 받아가며 초안과 똑같은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았지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당시 파면당했던 이한교씨는 이렇게 밝혔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면을 당하긴 했지만 15명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박정희 당시 내무장관을 비롯 서울시내 경찰서장이 총동원돼 소송 취하할데다 작업에 나섰다

"소송제기 마지막날인 9월 13일 속달로 소송제기 접수를 했지요. 속달로 한 것은 혹시 총무처에서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까봐서이고 마지막날 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뿐 아니라 모두가 마지막날 속달로 보낸 것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던 게지요. 그러자 소취하를 시키기 위한 작업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이어, 박내무부장관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발 한가마니씩 보내지고 '파면은 됐지만 퇴직금은 주겠다'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회유를 해온 것으로 밝혔다.

당시 파면된 사람들은 현재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한교씨가 그 책임을 알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소취하를 하였으나 이중 송영기 정보2계장, 이승래씨 등 3명은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자신들의 역할을 호소했다.

이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당시의 정황은 어땠는지, 당시 중부서장이었던 김원모씨와 경호경비를 맡았던 이한교, 이승래씨 등의 증언과 작고한 송영기씨(당시 정보 2계장)의 공판기록, 그의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974년 8월 12일, 청와대 경호실 소관과 중부서 일부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처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개최 이유는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될 광복절행사에서의 경호·경비 문제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기념식장 참석자에 '리본'과 차량출입증을 배포하고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립극장 입구 첫수위실에서 하차 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결정 사항은 14일 2차 관계관 회의에서 들연 변경되고 만다.

"차량출입증이 없더라도 정문을 통과 현관 앞까지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문을 하도록 했고요. 파잉 경호를 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영호상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문에 배치된 사부경찰의 한 사람이었던 이승래씨(당시 경위)는 그때의 변경된 지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초 결정되었던 비책의 변경을 중부서에 지시한 사람은 다음아닌 경호실 3과장이었다. 14일 열린 관계관회의에서 "파잉경호가 되지 않기 위해 비록 결정된 사항이지만 현재책임자인 자기가 변명시키고 보고하면 된다"고 주장, 대통령 도착 5분전까지는 차량출입증이 없더라도 차량이 정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문제 때문에 김원모서장은 3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일은 3과장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연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단상으로 뛰어오른 정체불명의 사나이 경호처장인 것으로 드러나

김원모씨는 경호실장과 자신과의 연경의 내용이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사건 당일인 15일 7시, 국립극장 앞에서 약 30분간 서장의 교양교육이 있고 난 뒤 중부경찰서 성동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등에서 동원된 병력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미 전날 자신의 배치 장소에 대해 구석구석까지 살피보는 등 배치와 경호요령에 대한 예행연습까지 마쳤던 터라 배치에 있어 별 문제는 없는 듯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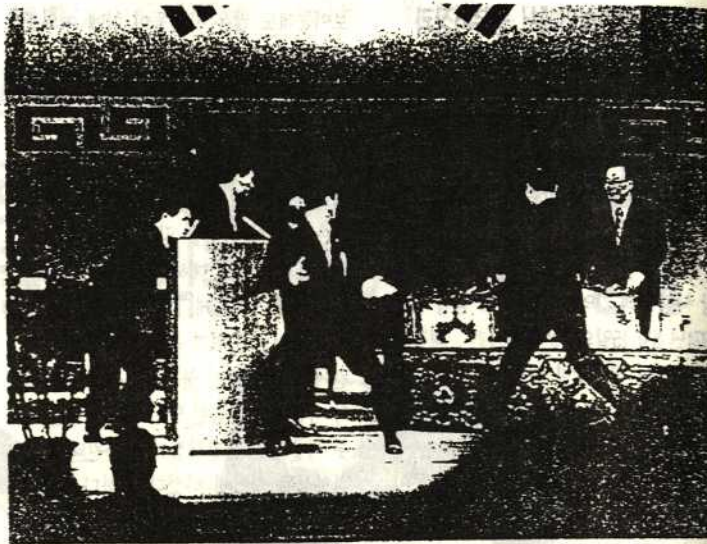
이날 국립극장의 경호·경비 계획 수립안을 작성한 이는 경비과장이었던 최유희씨. 그리고 국립극장 건물 전체에 대한 총책임은 최중환 정보과장이 맡았으며 장내의 책임은 송영기 정보2과장이 맡고 있었다.

서장의 교양교육이 끝나자 송영기 정보2과장은 자신이 맡은 구역의 병력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8시 30분경 식당 실내를 돌며 경위급 책임자들을 객석 후면에서 만나 배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3층을 순시하고 내려온 그는 대통령 입장 직전 무대의 제일 오른쪽 열인 E열 후면의 좌석에 앉았다. 곧 웅장한 취주악대가 대통령 찬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입장하고 광복절 경축사 낭독이 시작되었다.

10시 30분쯤 되었을까. 돌연 울려 퍼진 요란한 총성과 함께 장내는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의 순간에 대해 김원모씨는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이 입장하고 난 뒤 국립극장 102 박정희 실정백서



사건 당시의 무대 위. 육여사는 이미 쓰러져 있다

이초 결정되었던 계획의 변경을 지시한 사람은 다름아닌 경호실

K과장이었다. 14일 열린 관계관회의에서 '과잉경호가 되지 않기

위해 비록 결정된 사항이지만 현지책임자인 자기가 변경시키고

보고하면 된다'고 주장, 대통령 도착 5분전까지는 차량출입증이

없더라도 차량이 정문을 출입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관장, 경호처장과 함께 세명이 서로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며 바깥 로비의 무대 옆 출입구가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팽 하는 총성이 들려 경호처장은 단상으로, 저는 출입문을 박차고 장내로 뛰어들었지요. 범인이 통로를 내달리며 단상을 향해 돌진해 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 누군가에 의해 넘어진 범인을 무대 앞 통로를 따라 뛰어가 덮쳤습니다”

김한모씨의 이 증언은 그동안 의문에 싸여 있던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TV화면에 난데없이 단상에 뛰어오른 것으로 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 김한모씨의 증언대로라면 그는 경호처장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체포된 문세광은 서장과 송영기 정보2과장, 그리고 경호실

직원 1명에 의해 앰بول런스에 실려 메디칼센터로 옮겨졌다. 수사기관이 아닌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문세광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념식장에서의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영부인의 죽음과 함께 이 사건은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왔다. 문세광의 배후와 행적이 조사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수사가 곧 착수되었다.

나중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문세광의 행적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호텔에서 크라운차를 임대한 그는 차량의 출입증도 없이 정문을 통과하여 현관에 도착, 그리고 리본도 달지 않은 채 현관문을 통과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문세광의 진술에 의하면 이 때가 9시 20분경. 이후 그는 현장 로비에

서 서성대다가 실내로 들어가 B열 맨 뒷 좌석 통로에서 세번째(바로 통로 옆자리에는 사복경찰 K씨가 앉아 있었음)자리에 앉았다.

경호실 장모계장 '장관 만나러 온 사람'으로 문세광 소개

이어 대통령의 경축사 낭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총을 빼어들고 B열과 C열 사이의 통로로 뛰어나와 단상을 향해 내달리며 4발의 총을 쏘았다. 그리고 무대에 이를 무렵, 통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이태산'이라는 시민이 발을 거는 바람에 넘어져 체포되었다.

이상이 당시 발표 내용의 줄거리였다. 그렇다면 이 발표는 과연 틀림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우선 문제는 현관에서부터 제기된다.

국립극장의 현관은 모두 세곡이었다. 이중 중앙의 현관은 귀빈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양 옆의 문은 일반출입문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중부경찰서장이었던 김원모씨. 그는 이 사건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날 귀빈출입문 경비를 맡은 이는 이한교씨를 포함한 4명. 애초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 발표된 내용에는 그가 일반출입문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난 후 이 진술은 귀빈출입문 통과로 반복되었다.

이에 대해 이한교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키고 있던 4명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지만 분명 문세광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문세광이 자신이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점이다. 진술을 반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국립극장에 대한 사전탐사는 물론 도면훈련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 어느 것 하나만 했더라도 자신이 들어간 문을 틀리게 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들어간 문을 모를 수 있는 것인가? 발표에 따르면 그는 수십분 동안 로비에서 서성

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야 진술이 번복된 이유는 무엇이며 리본도 달지 않은 그가 어떻게 귀빈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한교씨는 뜻있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느 문으로 들어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각기에는 어느 쪽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과면되는 다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지요. 분명 우리는 문세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문세광은 현관을 통과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로비, 이 로비에서 또 하나의 최후의 일이 발생한다. 그때의 사실을 갖고 한 송영기씨는 현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각각 입장시에 내부 총책임과 최종 환 정보과장이 경호실 현장부책임과 장모계장으로부터 문세광이 장관 만나러 온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고 각하로서 입장하므로 최과장은 일시 문세광을 기동 뒤로 밀어내고, 입장 후에 다시 앞으로

“문세광이 귀빈출입문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 보지 못했습니다”



문세광이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 묵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 되어버려...'

얼핏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는 그러나 2년 후 사실로 판명된다.

사건 직후 최종한 정보과장은 다른 과면자들과는 달리 '구속'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죄명은 로비에서 리본도 달지 않은 범인을 검문하고도 놓아주었다는 것. 이에 대해 최과장은 서울형사지법에 항소했고 76년 10월 25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때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피고인이 당시 8·15 경축기념식장인 국립극장 로비의자에 비표를 달지 않은 저격범 문세광이 청와대 경호원인 장모씨와 앉아 있는 것을 발견, 검문했으나 장경호원이 '어느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해 장경호원이 잘 아는 외국인 또는 재일동포로 생각하여 경호의 주임무를 맡은 경호원이 괜찮다는 취지로 알아들었으며 박대통령이 입장할 때 文이 일어 서지 않자 文을 잡아일으켜 건물 기둥 뒤로 끌어들이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검문을 고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최과장의 판결은 이로부터 5년 뒤인 1981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비표도 달지 않은 저격범이 경호원과 담소를 나누는 민기되지 않은 일이 벌어진 로비에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을 저격하려 온 문세광이 대통령이 로비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도 왜 쓰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할 마음이었다면 연단 뒤에서 목만 내놓게 되는 장내보다는 온몸이 노출된 채 걸어들어오는 로비가 저격장소로는 오히려 적합했고, 실제 그때 그는 로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기회를 놓친 채 대통령 저격범으로서 너무도 태연하게 경비책임자에게 '들어가도 좋냐'는 질문을 던지고 허락까지 받은 다음 장내로 들어갔던 것이다.

문제는 장내에도 있었다. 장내 책임



문세광을 소개받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송영기씨의 친필문서와 공판기록, 각종 진술조서

'각하 입장시에 내부 총책임자 최종한 정보과장이 경호실 현장부책임자

장모 계장으로부터 문세광이 장관 만나러 온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고

각하께서 입장하므로 최과장은 일시 문세광을 뒤로 밀어내고, 입장 후에

다시 찾아온 문세광이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 묵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 되어버려...'

얼핏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는 그러나 2년 후 사실로 판명된다

자는 앞서 말한 송영기 정보2계장. 사건이 있고 난 후 그는 영동한 사실에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아래 간부들로부터 이상했다고 확인했던 장내 좌석의 병력 배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카메라의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의 관계가 있었다"

당시 좌석 A·B열의 병력배치 담당자는 김도 경위, 그리고 C·D·E열의 담당자는 강모 경위였다. 그런데 사건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총 25명이 배치되어야 할 A·B열에는 9명이, 그리고 34명이 배치되어야 할 C·D·E열에는 3명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통로를 사이에 둔 B열과 C열의 통로쪽 배치 병력은 B열이 본래 7명에서 4명으로, C열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등 모두 12명에서 8명만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B열과 C열 사이의 통로는 연단이 마주 보이는 중요한 통로로서 바로 문세광이 내달았던 곳. 결국 문세광이 맨 뒷쪽에서 무대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내달릴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병력 미배치에 대해 김도 경위는 자신의 진술조서에서 매고 오기로 되어 있던 넥타이를 매고 오지 않은 병력 9명을 교체해 달라고 송영기 장내책임자에게 말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결국 9명을 맨 채 배치를 하였다 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송영기 계장은 결국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장내에는 모두 12명이 미배치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한편 조사결과 범인 문세광은 자리에 일어서면서 자신의 발에 한발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장내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를 제지

하지 못했던 것인가. 더구나 그가 앉았던 좌석의 한사람 건너 통로 옆 좌석에는 사복경관이 앉아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김도 경위는 그 경관이 "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기에 머리를 돌리는 순간 이미 문세광은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고 송영기 계장

은 그 경관이 "총소리를 사진사의 플래시 소리로 오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할 사실은 당시 사건의 나기 7~8분 전쯤 청와대 사복기관원들이 카메라맨 10여명을 식당 바깥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체포된 문세광. 그는 테러리스트치고는 너무나 서툰 테러리스트였다



국내 신문기자들은 사건 발생 순간을 찍지 못했으며 TV필름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12명의 사복경찰이 장내에 미배치되었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카메라맨들을 쫓아낸 이유, 쫓아냈다면 카메라맨들이 없을텐데 뒤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플래시소리로 들린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김원모씨는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이 사건은 심지어 사진기의 플래시 터지는 소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 카메라맨들은 대부분 동그란 모양의 플래시를 썼는데 이것이 '펑'하고 터지는 소리와 총소리가 얼핏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첫총소리가 났을 때의 경황과 그의 말을 분석해 보면 결국 총소리가 카메라맨으로 분장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은폐되는 등 이 사건이 문세광의 단독범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문제의 발생은 비단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세광이 체포된 직후에도 생겨났다. 이번 문제의 발원지는 다름아닌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문세광을 덮쳤던 서장은 문세광의 호주머니를 뒤진 결과 여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가지고 "보여주었다."

"경호실장이 여권을 보더니 대뜸 '이거 조총련이구만'하는 말을 내뱉더군요. 자신은 몰랐겠지만 분명 실수한 것이지요"

당시 문세광이 지니고 있던 여권은 '우시이(吉井)'라는 일본사람의 여권. 또 여권번호는 E129397번으로서 E란 표시는 일본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인에게 발급된 여권임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때문에 그의 여권에는 우시이이고 그가 재일동포, 혹은 조총련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며 여권단으로 본다면 그는 당연히 일본인이어야 했다. 그런데도 박실

'박정희 경제' 환상을 깨라

97. 12. 12. 3345

포럼



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

경제위기와 대선이 맞물린 1997년 유난히 「박정희(朴正熙) 시대」에 대한 향수가 짙은 것 같다. 이것은 주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와 최근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 대응능력의 불신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는 실업률의 대폭저하를 비롯해 고용구조의 근대화, 수출의 폭발적 증가와 수출구조의 고도화, 산업과 공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투자 자원 국내조달의 대폭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 우선 계획 추진에 필요한 투자를 인플레이션과 외자에 의존할 결과 인플레이션을 지속시켰다.

급속한 공업화는 농업과 연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됐고 수출은 저임금에 기초해 추진됐다. 조립가공형 수출산업은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만들어 결국 수출증대는 수입증대로 이어지고 무역수지·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증가를 초래했다.

양산(量産)체제의존형 수출과 수출산업에 대한 각종 특혜 등에 기인한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부진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졌다. 타인자본의존형 투자 자원 조달로 저(低)자기자본비율의 지속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외국기술도입의 증가로 국내기술개발의 부진과 저국내기술수준을 지속시켰다.

이와 같이 박정희시대의 계획경제는 많은 부작용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야기했다.

이 중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현재도 그대로 부작용으로 지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리어 확대·심화돼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한국경제 어려움은 박정희 시대에 싹트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박정희 시대를 말할 때 필수적으로 평가되는 「고성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 집권육의 산물이었다.

개헌과 대통령 당선에 박정희의 장기집권육의 발로라 할 때 고성장은 장기집권육의 산물 내지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계획이 5·16 쿠데타의 합리화 수단이었다면 2~4차 계획은 박정희 장기집권의 합리화 수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경제의 부작용은 투자 위주 자원 조달 방식, 공업화방식, 수출진흥방식, 계획집행방식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2~4차 계획에서 경제체제를 선진국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추진과정에서의 경제체제는 전전(戰前)의 일본이나 독일의 통제경제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경제체제는 정부가 강하게 간섭하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가 된 셈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계획은 1차 석유파동 등의 불황을 겪으면서 정치압도 없이 군대식 돌진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불황은 기업체질, 경제체질·강화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의 정치압도 없이 불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체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기업도 경제도 덩치만 커져 버렸다. 현재의 타인자본 내지 차입의존형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존립하게 된 것이다.

국가부도사태를 맞은 어제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GNP)의 대폭 증가를 말하는 고성장의 허구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계기로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느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대의 한국경제에 철저한 메스를 가해 어떤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의 진정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 어려움이 계획시대가 낳은 부작용이 확대·심화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고성장시대에 대한 향수는 그 어려움의 근본원인을 그대로 얻어 둔 채 덩치만을 부풀리는 잘못을 반복하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5일 한국의극대서 열린 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 「박정희 시대 개발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학술대회가 발표.

장은 한번쯤 의심을 해볼만 하건만 대담 그의 신분을 조총련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마치 그러기로 되어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날의 박실장 말 그대로 문세광은 조총련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총련이었을까요?"

김한모씨는 반어법의 표현으로 문세광이 조총련이 아니었음을 지적했다. 문세광의 소속에 대해서 송영기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국 오사카시 개일거류민단 한청(한국청년동맹) 소속...속칭 김대중선생구출투쟁 위원회」

원래 한청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간조직의 산하단체였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3선개헌을 계기로 민단 내의 일부 인사들이 유지간담회를 결성했는데, 그것이 민족통일협의회를 거쳐 결국은 김대중씨와 연결을 맺게 되는 한민동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한청도 민단 산하를 떠나 말하자면 반체제파인 한민동의 산하단체로 변모해 갔던 것. 그러나 당시 '한청'은 반체제단체였지 조총련계는 아니었다.

어쨌든 박실장은 분명 일본인으로 나와 있는 여권을 보고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대담 조총련으로 단정하였으며 또 실제로 개일거류민단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문세광은 박실장의 말에 어김없이 조총련으로 꾸며져 발표되었다.

국립극장 현관에서부터 로비, 장내 그리고 사건 직후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문세광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처럼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이일로 파면된 경찰관 중 많은 이들이 억울해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자술서를 미리 써놓고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이한교씨의 경우처럼 이들 대부분은 당시의 흥분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항변조차 제대로 못해 본 체 자신들의 억울한 감정을 묻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1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는 송영기씨 외 세 사람 뿐이었다. 온갖 회유와 압력 속에서도 그는 끝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패소한 송영기씨는 끝내 자신의 한을 풀지 못하고 87년 뒤져했다

「경호실장이 여권을 보더니 대담 '이거 조총련이구만' 하는 말을

내뱉더군요. 자신은 몰랐겠지만 분명 실수한 것이지요」 당시

문세광이 지니고 있던 여권은 '우시이(吉井)'라는 일본사람의

여권. 또 여권번호는 E1288975번으로 E란 표시는 일본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 일본인에게 발급된 여권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언젠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내 억울함도 벗겨질 것이라고 그분은 늘 암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관련 경호실 관계자들 외국 도피하거나 잠적해 버려

송영기씨의 부인 광말희(56)씨는 남편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했다. 송영기씨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지 않아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비단 송영기씨 뿐만 아니라 김한모, 이한교, 이승래씨 등 이때 파면된 많은 사람들은 「파면」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일부는 실의와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

도 있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해왔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힘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관련되었던 경호실 직원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K도 과장은 의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세광이를 소개했던 장도계장은 일시 구속되었다 풀려나와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수사시 그들과 대질 심문을 한다거나 해본 적도 없고요」

당시 파면되었던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커다란 보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파면사유에 관한 직무유기나 죄득태만을 한 것이 어딘을 밝혀내는 것. 이와 함께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희생양이었다」고 **호소**

아침을 열며

99.8.24

은 고 (高銀·시인)

어떤 새기지 않는 사람이 한국 국민을 「들쥐」라고 입을 놀렸다. 그 「들쥐」가 한국어 그대로 들쥐인지, 들쥐와는 다른 종류의 짐승을 뜻하는지는 훨씬 뒤의 공채한 번역인 뿐이었다.

80년대 벼두 신군부가 나라의 권력 일체를 틀어쥐던 그 폭압의 시절에 그 군부세력을 드러내놓고 위협하던 수작이 한국 국민을 들쥐로 부르는 당혹기에

민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다시 한번 한국 국민을 그렇게 말한다면 가민히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를테면 그런 말에 어떤 의미도 제기할 수 없는 절대 공포가 바로 유신체제를 고스란히 상속 받은 신군부 시절의 그것이 아니었는가.

바로 그렇게 국민을 맹종으로 몰아가며 들쥐로 만든 무단(武斷)의 근원적 박정희가 있다. 나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그 뒤의 신군부 시절을 일관된 실감으로 살아온 사람중의 하나이다. 그 실감이란 어느만치 고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세사스립

게 박정희나 그 이후의 통치자에게 대한

실없는 중도 때위에 고착함으로써 시대인식의 발전을 감정적으로 억누를 생각은 없다. 그때는 그때이고 오늘날은 틀림없는 오늘이다.

그로서 박정희시대 : 내상을 사시듯하게 떠올리면 그가 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뒤의 유족의 이산(遺産)과 방향에 한 가닥 연민이 고이지 않을 수 없기까지 하다. 아니 부인이 피부성인의 참변을

당한 이래 나는 그의 정신적 방황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구호대상국의 남루한 수혜자(受惠者)인 한국을 고도경제성장의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선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는 서민적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서민적 공감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국민에게 순종만을 요구했고 끝내는 입법 시범 언론은 물론 이거니와 제법까지 그의 권력의지를 반영시켰다. 도리어 이승만시대의 민주적 국가구조까지 살살이 그의 통치권의 장치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입법부는 아예 3분의 1의 임명위원과 그의 뜻이러면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가. 과연 그는 이 땅을 가난에서 건져 올려는데, 그 자신의 몸을 바쳤다. 그런데 이같은 '가난 이기기'는 오히려 그가 혼자서 이룩해낸 것이 아니라 온갖 가능성을 다 발휘한 국민의 위대한 책임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정희를 말할 때 한국 국민의 부흥상이 간과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 실제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 즉 박정희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유보한채 우리는 그 이후의 격동기운에서 살아왔다. 바로 이같은 현실이 어떤 결실을 맺어주기 위해서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심정적인 우상을 그리워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지 모른다.

나는 이승만을 좋아하는 박정희를 좋아하다가 전두환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절대권력에 속해있던 회고일 경우 막을 생각이 없다. 아니 그들의 시대를 기성세대로 살지 않은 신세대 의 발전적 성향이 도리어 정치적 우상으로서의 박정희를 지지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

절대 다수석으로 이루어졌고 대법원장 실에는 역대 대법원장의 사진 대신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야 했다. 그 시절의 감옥은 양심수로 초민원을 이루었고 말 한마디로 10년을 선고받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의 박정희를 예찬하는, 그의 엄청난 과오까지 왜곡되어도 좋다는 항수에 젖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것인가.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례법까지, 시습이 시퍼렇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말한

'박정희 현상'



경향 2000.4.26

강준만
전북대 교수
신문방송학

박

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은 정신나간 일이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인지 자주 발도 안되는 독성을 양산해내 뉴스에 굶주린 일부 신문들을 기쁘게 해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모처럼, 옳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런 '정신나간 일'이 벌어진 걸까? 김대중 정부는 부인하지만, 그런 박정희를 대대적으로 존경하는 영남 민심을 불잡아 '동·서화합'을 해보자는 뜻으로 기획된 것이 틀림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동·서화합'만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정략'엔 얼마든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동·서화합'의 관점에서 보자면, 김 전 대통령에겐 기념관 건립을 비호할 자격이 없다. 그는 여태까지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민주화를 염려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박정희를 존경하는 영남 민심을 향해 박정희

가 저지른 악행(惡行)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김대중 정부의 '정략'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분명해졌다. 김대중 정부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탈락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천만의 말씀이다. '지역주의' 문제에 관한 한 김대중 정부의 무지와 무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닌가.

김대중 정부가 '정략'이 아닌 다른 뜻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이미 수많은 반대자들이 그 문제를 잘 지적했기에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다. 진정 '기록과 평가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추진하는 일이라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50대 50'으로 하자. 그 기념관의 반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맡기고 나머지 반은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 인사들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즉,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균형되게 기록하고 전시하지는 것이다.

정동칼럼

박정희기념관 이렇게 풀자

나는 그림 전체로 하여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왜 그런가? 정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지만, 인문계는 여전히 '유신시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과 '5공' 찬양에 앞장섰던 신문들이 여전히 한국 신문계의 정상에 군림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끔 과립치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재 우리 국민은 박정희의 공(功)은 귀가 많도록 듣고 있지만, 그의 과(過)에 대해선 얼마나 듣고 있는가? 예컨대, '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다음과 같이 절규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을 얼골 한번 못 보고 아침 이슬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가 아프도록 꼭 쥘어서 뵈곤 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친필을 받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그렇게 한(恨)뎀힌 고소를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시절 부귀영화를 누리려 자기 정당화 차원에서 '박정희'에 찬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록권 계층으로 이 사회의 인로(仁路)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라고서야 어찌 훗날의 역사적 평가인들 제대로 될 수 있으랴. 정부가 기념관 건립에 2백억원만 쓰겠다는 건 너무 인색하다. 더 써야 한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모든 악행을 기록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이런 '50대 50'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 기념관 건립은 그들의 뜻에 의해 취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가?

한겨레 2000.11.26



김근경

'박정희 기념관'서 생각할 점

다.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나라의 현대사가 크게 왜곡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

실로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는 우리의 역사 인식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가 끼친 18년 동안의 공과를 떠나 절대로 지나치지 못할 것은 그의 식민지 장교 경력이다. 나라와 민족이 식민자의 알제 아래 신음하는 터에 그는 자원하여 식민지 군대 장교가 되었다. 그가 졸업한 학교는 민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다. 일본 군국주의를 지키는 첩병이 되어 그가 배속받은 곳은 같은 또래 동족청년들이 독립운동을 벌이는 민주지역이었다. 식민지 군대의 장교로 독립군과 총칼로 마주 대할 것인데, 이 일은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두립군에 총칼 겨논 일본군장교

그의 기념관 건립이 논의되는 지금, 이러한 이력을 무겁게 따져야 하리라 본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가 독립된 나라에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리도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후세에 길이 남을 기념관 짓기를 두고 설왕

박정희 기념관을 세운다는 계획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요 몇 해 박정희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대단했던 점과 비교하여, 그 비판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할 만하다. 지금으로 보아 그 기념관을 뜻대로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기계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한 터이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그 부당성을 잇달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것은 한 나라를 18년이 통치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널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이 아직은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실제로는 기념관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안다. 그렇다 해도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평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식민지 장교가 되어 총부리를 들립군 가슴에 겨누었던 반민족적 이력만으로도 그의 기념관은 세우기 어렵다. 거기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반인권 폭정을 저지른 일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런 태부나없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려되는 가치관 혼돈

일부에서는 경제 개발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말한다. 개발의 주체가 떠올린 국민을 이므로 그러한 주장에 신평 동의하기 어렵지만, 설령 그것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민족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가, 사람이 지켜 마땅한 가치를 소중히 지니 보 존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을 지향하여 살 수 있다.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며, 이런 혼란이 반복되면 사람의 삶은 불행해진다.

— 논설주간 kkk@hani.co.kr

우리 풍수는 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갖는다. 풍수를 연구해 비유컨대 땅이 무대라면 그 주된 배우요, 지도자는 연출자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무대에 관심을 갖는 달 뿐 중요한 것은 연극이므로 배우와 연출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풍수학인이 '연극'의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출자 박정희에 대한 풍수적 관심은 그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햇빛에 비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고인이 된 작가 이병주의 지적처럼 박정희란 인물은 지금 달빛의 음울과 저습함을 받으며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 달빛은 대표적인 음이며 그것은 태양의 양에 대하여 밝이란 뜻이되는 셈인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개발지상주의 부작용

음생식물이란 게 있다. 이끼나 양치류처럼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지금 박정희의 혼령은 음생식물처럼 음속 속에서 끈질기게 자라나 이미 일부에서는 위대한 전설로 성장해 있기까지 하다. 중원 미륵사지(충주시 상모면 소재) 미륵석상 밑에는 좌대 속에 물 받는 그곳이 하나

더불어 생각하며

97.11.1.

겨레

박정희 신화 허구성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

의 반영일 것이다. 모든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지금 5·16과 제3공화국과 유신시대가 돌아왔다고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왜 없겠는가.

지금은 한 사람의 인물에 의하여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통치되는 시대가 아니다. 법과 조직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이다. 박정희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의 동료, 부하, 추종자들이 아직도 사회 각 분야의 현장을 떠나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단대인일 뿐이다. 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뒤 나온 유신과 긴급조치들은 그가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의 일종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그때를 잊은 듯하다. 그에 의하여 우리 국토는 이른바 개발의 길에 들어섰다. 조국근대화는

바로 개발과 맞물려 있는 그의 철학이었다. 그것은 국토 자연의 처지에 서 보자면 훼손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대로이다. 물은 오염되었고 공기는 공해에 찌들어 산뜻한 바람을 맞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반풍수의 현상이자 풍수적 말세의 조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훼손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 황폐화하는 근본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여겨진다면 지나친 감정일까.

호국영령 차별 안될망

'인결은 지령으로부터'라는 말은 중국 동진시대의 광박이란 사람이 쓴 금강경이란 풍수서에 나오는 것이지만 그 본뜻은 산의 청람함이 인성을 순화한다는 정도의 해석이라야 옳다. 그가 묻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그의 자리는 술기의 얘기 로 공작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명당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의 사후가 어떠한지를, 허망하기 짝이 없는 풍수발복론이다. 필자는 오히려 그곳에 묻혀 있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차별 대접을 받고 있음에 분기가 쏘인다. 왜 누구는 화장에 묘역이 좁고 또 누구는 매장에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는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이 아니던가.

우상으로 되살아 난 망령...박정권의

죽은 망령이 지금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망령'에 대한 향수는 부풀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박정희 재평가 작업이나, 술하게 쏟아져나오는 그 시절 회고기, 소설로 되살아난 개인사 따위에서 '박정희'가 한국근대사와 뿔뿔이 떨어져 수 없는 관계에 묶여있음을 새삼 확 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학계는 어떻게 시각을 정리하고 있을까. 학술단체협의회(회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지난 25일 서강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박정희 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이 학계의 비판적 시각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상조 한신대 교수(경제학과)가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사이비 신자유주의'를,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과)가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와 한국경제성장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정성호 고려대 강사(정치학)가 '박정희정권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그 역사적 유산'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가 '박정희시대, 이성의 파괴의 우상의 신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요 대목을 정리했다.

▶김상조 한신대 교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개혁그룹의 개혁만능론이든 또는 재벌의 시장만능론이든 간에, 노동대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이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축적의 구체적인 수단 차원에서는 박정희를 극복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자본축적의 기본 철학과 전략 차원에서는 박정희의 후계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박정희 신드롬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바로 박정희 신드롬의 진정한 수혜자이며 나아가 그 창조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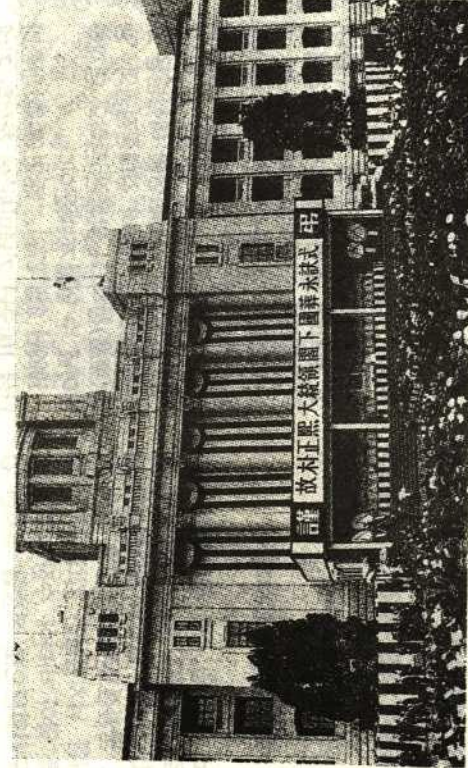
특히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인 재벌은 노동대중의 권리와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심지어는 유혈대륙식 신자유주의·필사자주의적인 개혁정책조차 거부하고 있는 박정희시대의 살아있는 화신이다. 재벌이 살아 있는 한 박정희 역시 영원히 살 것이다. 따라서 노동대중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는 재벌의 친민적 소유권 의식(후진성)과 규모의 확대를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재벌의 축적욕(독점성),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재생산하는 정경유착(부도덕성)

등을 근절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대중의 주체적 권리 획득여부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동아시아 성장론의 흐름과 연관시켜 보면 박정희 시대 미화론은 발전국가론의 정치적 함의와 연관돼 있다. 발전국가론은 국가가 여러 사회집단의 요구 및 압력을 넘어서서 자율성을 가지고 효과적 수출산업 지원 등 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이 가능했다는 논리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효율성을 관료제의 효율성 등에서 찾는 등 구조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발전정책의 계급적 선택성, 즉 발전정책을 둘러싼 여러 사회집단 및 계급 간의 갈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선진화 등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킬 뿐, 환경파괴,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부정적 측면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국가의 자율성, 국가의 개입주의적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일종의 '국가절대화

② 폭압적 성격 직시해야



□ 우리사회에 불고있는 '박정희 신드롬'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신적 혼미'를 반영한 '우상숭배'라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성된 반공병영사회는 냉전의 논리가 내전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하여 내적인 의사합의로 전화되고 그것이 개인 및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우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군부권위주의정권에서 포스트 군부권위주의적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의 '보수적 민간정권' 시기에 박정희 신드롬이 부활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상실할 때 과거로 회귀한

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박정희 정부가 상징하는 국가주의적 동원화와 권위주의적 통합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조건 속에서, 이전의 국가주의적 동원화와 권위주의적 통합화의 방식을 부활하려고 하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퇴행적 향수를 전제하고 있는 박정희 신드롬은 민주화의 목표를 상실한 현 보수적 민간정권시대의 정신적 혼돈, 사회발전의 방향상실로 인한 지적 혼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많은 사람이 들이 역사는 장기적으로 이성의 실현이 관찰된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이성의 관란이 돌아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 같다. 박정희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는 박정희정권 기간이 바로 이러한 반이성의 전면적 지배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반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죽은 박정희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상화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민주항쟁과 6월항쟁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남으로인해 4·19혁명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평가와 같은 역사과정은 거치지 않고 유신정권인 전두환과 노태우로의 권력 승계, 3당합당이래는 과정은 거쳐 김영삼의 권력승계라는 역사과정을 거친 장기적 역사행로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신독재와의 단절을 기하지 못하여 잔존세력이 연

제든지 부권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권이 권력행사에 노출한 정당성의 상실을 계기로 이들 잔존세력들은 박정희가 뿌린 군사문화주의, 성장제일주의, 역사모멸주의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김영삼 수 많은 박정희 동조자들을 박정희의 폭력위주의 강력한 지배력과 경제성장에 대해 향수를 느끼게 만들었다.

문민정부라는 김영삼정권은 여소야대라는 과거창산 구도를 깨뜨리고 3당합당으로 박정희 잔존세력에 아합함으로써 이후 박정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 구조를 공고화하는데 조력했다. 더 나아가 한보비리와 김현철사건으로 국면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게 직접적 원인을 만들었다. 개혁실종에 기인된 집단적 좌절감이 이러한 허무주의와 낭만주의와 결합되어 군부독재 지를 영웅으로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투쟁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성의 파괴이고 우상의 신봉이다.

박정희의 독재권력에 얼마나 많은 비리나 인권말살 행위가 그의 철권통치 때문에 사회적 쟁점화 되지 못했는가 하는 '쟁점의 비쟁점화'(non-issue of issues)의 원천적 문제점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이성의 상실 현상이 박정희신드롬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예찬론은 근거가 불명확한 신드롬에 불과하고 우상의 신봉에 불과한 것이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중앙청 안의 한 넓은 방. 허우대가 큰 문장장관은 새벽녘 푸르디푸른 빛을 받아들여 한층 검게 빛나는 대형 질판에 '박정희대통령 유고(有故)'라고 썼다. 18년 장기집권자의 최후였다. 어느덧 중앙청에서 세종로에 이르는 큰길기에는 라디오 긴 급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특히 새벽 잠이 없는 노인들이 많았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임금의 서거(逝去)에 흰옷을 입고 나와 통곡하던 조선인, 바로 그들이었다. 박정희는 임금이었다가? 그랬다.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박정희는 배고픔을 잊게 해준 '영명한 군주'였다. 한 미국인 기자가 물었다. "당신들은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들은 또 누구인가?" 그는 박정희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인 인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중성은 지금도 완강하게 존재한다.

헛갈리는 역사적

1973년 8월 8일, 2년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박정희와 맞섰던 김대중은 일본 도쿄호텔에서 일단의 피한들에게 납치됐다. 중앙정보부의 지휘를 받은 것이 확실한 납치범들은 김대중의 몸에 쇠몽치를 달아 바다에 수장(水葬)하려 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김대중은 닷새 후 서울 동교동 주택가 골목에 풀려났다. 그후 박정희가 끝난 때까지 김대중은 투옥과 연금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해야 했다.

1999년 5월 13일, 김대중대통령은 대

전진우 <본설위원>



朴正熙, DJ & 昌

꿈을 준다면 새로운 시대 정치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남북문제의 관련한 '이회창 탈레마'도 결국 그러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입다문 한나라당

'이회창 탈레마'는 최근의 '박정희 기념관' 논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200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까지 들여 '박정희 기념관'을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옆 공원부지에 세운다고 했는 데도 한나라당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 흔하던 대변인 성명서 한 장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입조심 말조심이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을 살피야 하는 데다 당장 박정희대통령의 큰딸인 박근혜(朴槿惠)부총재를 대하기도 껴없기 때문인 듯 싶다.

물론 소속 의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우보수에서부터 진보에 이르는 한 나라당에서 '박정희 문제'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듯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야당인 공당이라면, 이회창총재가 한 시대의 정치지도자라면 적어도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공적인 답변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한국의 정당이 이념이나 철학이 빈곤한 도당(道黨)의 측면이 강하다고 해도 역사에 침묵해선 안된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youngji@donga.com

테러세력의 핵심이 된 셈이다. 이쯤되면 DJ의 진정한 역사의식은 과연 무엇인지 헛갈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박정희정권 시절 줄곧 관사직에 있었다. 그가 그 시절 나뉠대로 '올곧은 법관'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창재에 대해 '도메스틱 베스트(Domestic Best)'라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의 주어진 내부여건 하에서 '최고'를 지향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최고를 단지 권력으로 볼 필요는 없다. 최선을 뜻한다고 보는 편이 보다 옳을 것이다.

하지만 그 '최고 지향' 속에 역사와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기 인식 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그런 노

구에서 "박정희대통령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측은 '피해자 김대중'의 '가해자 박정희'에 대한 용서는 역사적 화해이자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위대한 결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일방적 논리의 허구성은 제쳐두더라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김대중정권의 '동진(東進)정책'과 맞물린 정략의 변세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9년 8월 27일, '장면(張勉)전총리 탄생 10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한 김대통령은 "장면박사는 5·16 군사쿠데타 세력의 세뇌작업으로 오랫동안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5·16세력을 비난했다. 석달 전 '역사 속에서 존경받아야 할 지도자'는 다시 비난받아 기뻐할 쿠

한겨레
200. 7. 21

국고로 박정희 기념관을?

19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의가 열려 박정희 기념관 및 도서관을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는 서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평화공원 안에 건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 기념사업회 신현확 회장과 권노갑 부회장, 행사부장관, 서울시장, 청와대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의가 왜 청와대에서, 집권당과 정부, 청와대의 핵심 실력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을까? 그렇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발의로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스스로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건국 50년 만에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직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꿈꾸었던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나서서 것도, 그 일에 700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과 모금을 쏟아붓는 것도, 하필 새천년의 꿈을 담아야 할 상암동 택지지구에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는 믿는다. 지난해 5월 김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중고교 교사 등 1천여명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전국 역사학자 모임'을 구성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이런 의견

들이 수렴되기는커녕, 당시 거론되던 경복궁미에서 한술 더 떠 세계의 눈구가 쏠릴 월드컵 주경기장 옆에 연건평 2000~3000평의 거창한 기념관을 짓겠다니 놀라울 뿐이다. 일본군 장교에서 시작하여 합법정부를 전복한 쿠데타에다 장기집권을 획책한 독재전력 등 그가 민주주의에 끼친 폐해를 삼삼스레 열거할 생각은 없다. 그가 경제개발에 끼친 공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설령 그것을 일부 인정한다 해도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의 전력을 미화시킬 수 없다. 정부가 나서 기념관 건립을 서두르기에는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껏 매우 부정적이다.

정부는 이달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박 정권의 유신체제 이후 5, 6공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통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 유신독재의 장본인을 위해 국고로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이 많이 되는가. '과거와의 화해' '동서 화합'이란 말로 포장된 기념관 건립은 결국 영남 민심 불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자, '박정희 찬양관'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짓겠다는 설명도 나오는 모양이다. 애초에 접근이 그릇된 마당에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정부 주도의 박정희 기념관은 짓지 않는 것이 옳다.

등아임 2000. 7. 27 金 '朴正熙 기념관'有感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 기념관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조성되는 공원에 세우기로 했다는 보도도, 또 기념관에 드는 비용 700억원 가운데 500억원 은 민간모금으로 대고 나머지 200억원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전대통령기념사업회의 신현화(申鉉燾)회장 권노갑(權魯甲)부회장 최인기(崔仁基)행정부장관 고건(高建)서울시장 한광옥(韓光沃)대통령비서실장 등이 19일 '청와대 회합'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특히 그의 고향 이 아닌 서울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한 것은 유족의 희망을 고려한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는 본관을 통해 이미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엿갈리는 시점에 다른 전직 대통령을 제쳐놓고 유독, 그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희전대통령이건 누구건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기념사업에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전직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예산까지 뒷받침해가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지적을 이룩한 영도자'라는 극찬이 있는 반면 '인권을 침탈한 독재자'라는 시기도 엄존하며 아직 그 폐해도 되지 않은 사점이다. 그런

데 정부가 '청와대 회합', 국고지원 등으로 그에 대한 기념사업을 돕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념관을 고인의 향린인 경북 구미시가 아닌 서울, 그것도 월드컵경기장 주변 내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공원 안에 짓도록 부지(5000평)를 제공한 것도 유족과 기념사업회측의 '송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정부와 기념사업회측은 송배 일변도가 아닌 객관적으로 공과(功過)를 판단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을 만든다는 주장이지만 기념관이라는 성격상 당대의 '과오와 반성거리'까지 진솔하게 담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하게 일각에서는 지난해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반대하는 모임까지 만들고 결의대회도 연 바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독재자의 역사'가 기념이라는 뒤집힌 역사의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의 기념관 건립과 국고 보조에 반대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정부의 역사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체성(正體性)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기념관 국고지원 안돼

사실 '국고로 박정희 기념관을? (2)일치 4번)을 읽고 쓴다. 그동안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해 국민 다수가 줄기차게 반대를 했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 수백억원의 지원금까지 대면서 짓겠다는 것은 이 정부의 역사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부분은 사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에서 특정인을 평가할 때 재료가 열정해야 역사의 동어의 시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부의 박정희 평가는 어찌구무가 있다. 박정희가 누구인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면 예기는 접어두더라도, 그는 4.19 민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대통령에 취임해 장기 집권에 눈말이 3선개헌과 유신헌법 등으로 헌정서를 얼룩지게 했으며, 집권 18년 동안 아니라 민주주의를 집국의 상테로 몰아넣고 인권은커녕 국민의 기본권조차 철저히 유린해 우리 사회를 군사파시즘의 병역사회로 만들어 국민의 의식마저 파괴한 정분인이다. 혹자는 박정희가 우리 사회의 국가에 끼친 공과는 양면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문제로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도 하지만, 공과를 수치적으로 따지면 과거 공을 인도해 더 이상 다른 재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본다. 백 보 천보를 양보해 굳이 기념관을 세우겠다면 명칭은 박정희 역사관이 합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관에는 집권 18년간 자행한 한 정 유권과 인권 탄압, 민주주의 앞질 그리고 수많은 의문사와 정권 유지를 위해 자행한 사법실인의 죄상을 낱말이 기록·보관·전시해야 국민의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찬규/전북 진주시 여진동

박정희 평가 후대에 맡겨야

'국고로 박정희 기념관을?'이란 사설(21월지 4번)을 읽었다. 한 인물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필요성과 인물의 역사적 기록을 뒤이음이 후대에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념관 건립의 취지가 과거와 의 회해, 동시화하더라는 것은 현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개발에 끼친 공로에서부터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까지 다양하다. 아직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념관 건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만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박정희 기념관은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후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찬규/전북 진주시 여진동

박정희 2000. 7. 27



논 단

김영현 소법

참으로 헛갈리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세상이란 게 원래부터 기하학적으로 완전히 무모순의 질서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이란 게 있고, 상식이란 게 있는 법이다. 사람이살이에 원칙이 없고 상식이 없다면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이살이의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도덕이며 역사의식이며 정치행위이다.

그러하여 도덕과 역사의식과 정치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그 원칙과 상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헛갈린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일종의 가치 착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얼마 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군사독재의 발톱 아래서 민주화를 위해 애쓰다가 정신적 으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된 경우나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은 사람,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문사, 아깝게 산화해 간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인다. 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며 때늦은 감마저 든다.

4월 민주혁명을 뒤집고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우리의 삶 구성구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른바 시월유신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장치를 통해 모든 민주적 언론을 봉쇄하고 총화단결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인 가치관,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자질을 극도로 떨어뜨렸고 불신공조와 한탕주의식 친민주주의가 널리 자리잡도록 했다.

그렇지만 아니라 냉전논리를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족간의 불화를 가중시켜 분단고착화에 앞장섰으며, 절대 권력의 우산 아래 수많은 비리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만들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뒤처리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지출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판에 상암동 새천년 세도시의 중심에 5천~7천평 규모의 '박정희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유신시절 경제관료로 온갖 지위를 다 누렸던 신현화씨와 현 정권의 핵심권력인 권노갑씨, 한화갑씨 등이 모여 국고 200억원을 지원하기까지 하면서 박정희의 영광을 대대로 남길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니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의 주역들을 위한 대대적 기념사업이 라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딸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현 정권의 양배 양시적 작태가 사람을 더 헛갈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다.

나는 박정희와 그의 집권 시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나 역사적 평가에 대해 조금도 선입견을 가지고 싶지 않다. 죽은 자의 관 위에 매질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의 망령을 업고 아직도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자를, 압담하고 처절했던 지난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경고를, 그리고 망각의 그늘 속에서 그에 대한 야릇한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민주화조차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용서와 화해는 미덕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정의의 실현은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누가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용서할 권리를 현 정권에게 주 었단 말인가? 단언컨대 정산 없는 개혁이란 어떤 미명 아래에서도 있을 수 없다. 해방 이후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러했고, 만수산 드림힐처럼 이 합심하고 있는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작태가 그러하다.

망각을 화해로, 구약과의 공존을 용서로 치부하는 모든 정치적 술수가 더 이상 사람들을 헛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야합의 산물인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계획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간계제 200. 7. 25. 土

박정희기념관 건립 안된다

민주주의 짓밟은 인물 기념관 건립 어이없어

7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5월 '역사적 화해와 근대화 공헌'을 내세워 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박정희 기념관', '근대화 공헌'이라는 공로는 인정하더라도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싹을 뽑아버린 그를 기념하기 위해 국고에서 200억원을 지원하더니 어이가 없다. 어떤 역사적 비판도 없이 '근대화 공헌'이라는 표적 아래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철회돼야 한다. 2002년이 기념관 완공 예정일이라는 게 그 취지를 불순하게 보이게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정희 기념관이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지역

장기 집권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민주 근대화교를 나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친일본자였다. 또한 6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될 때,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았고, 집권기간에 인권 탄압이 극에 이르러 수많은 민주인사가 사인 불명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또한 그런 통치원리가 군부 출신의 후계구도로 이어지게 만들어 민주질서를 반세기나 후퇴시켰다. 말기에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도 꾀했다. 그런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짓는다니 말이 되느냐. 이제 모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념관 건립을 막아야 한다. 청와대는 '개인숭배가 아니라 역사기록관 및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지만, 기록관이나 도서관의 개념이라면 어떤 특정 도서관의 한쪽에 마련해도 충분할 것이다. 700억이나 들여 기념관을 세울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최선태/서울 종로구 서의동

'박정희 기념관' 계획 철회를

200. 7. 24
7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다. '근대화 공헌'이라는 공로는 인정하더라도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싹을 뽑아버린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2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어이가 없을뿐이다.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심판도 없이 '근대화 공헌'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용서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에 대한 기념관 건립은 결단코 철회되어야 한다.

2002년이 기념관 완공 예정일이라는 것으로 인해 그 취지가 불순해 보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정희 기념관'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지역 달래기로 전략하게 될지도 심히 우려된다. 청와대는 설립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목적도 불분명한 '박정희 기념관' 건립계획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홍승환·대학생·서울 중랑구 면목8동>

“이성 파괴와 이상 신봉의 세기말적 현상”

19. 4. 27 금 새시날

학단협, 박정희시대 본격 비판 나서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박정희시대'는 일종의 세기말적 이상 신봉과 같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학술단체협의회(회장 박진도)가 서강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박정희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에 발표자로 나선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에 의해 제기됐다.

강교수는 "박정희의 독재권력하에 얼마나 많은 비리나 인권말살 행위가 그의 철권통치 때문에 사회적 쟁점화 되지 못했는가 하

는 '쟁점의 비쟁점화'(non-issue of issues)의 원천적 문제점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이성의 상실 현상이 박정희신드림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정희에찬론은 근거가 불명확한 신드림에 불과하고 우상의 신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한신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박정희신드림의 '진정한 수혜자'이며 나아가 그 '창조자'라고 주장해 논쟁을 끌었다. 김교수는 재벌개혁과 노동대중의 주체적 권리획득만이 박정희신드림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과) 역시 "최근의 박정희 미화는 경제발전의 긍정적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당시의 폭압적 성격은 의도적으로 은폐되면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과거의 권위주의에 대한 "퇴행적 향수를 전제하고 있는 박정희 신드림은 민주회의 목표를 상실한 현 보수적 민간정권시대의 정신적 혼돈, 지적 혼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근대화'와 그 열매를 상징하는 성장·개발론자들이 어떤 반론을 전개할 지 궁금하다.

국원일보 200. 7. 25 土

71개 시민단체 “박정희기념관 반대”

한국남세자연합과 청년연석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등 71개 단체로 구성된 올버튼 역사만들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개별 대통령 기념관 대신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교육

할 수 있는 시설로 모든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연석회의는 "박정희 기념관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도 20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로 건립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남세자연합 이필우 대표는 "박정희는 대표적인 반 민주인사로 정치적인 고려로 기념관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2000. 7. 25. 8
 대안당대의
 여야 386세대 초선의원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여야 386세대 등 젊은 초선의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고 정부예산 지원금을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의 김성호·송영길·임종석 의원 등 386세대 의원과 정범구·이종걸 의원 등 40대 초선의원들, 그리고 한나라당 정병국·심규철·안영근 의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야 젊은 초선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경제발전 측면에서 이룬 성과는 인정되지만 자유와 인권·민주주의를 억압한 장본인으로서 기념관을 세워 기릴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관 건립에 지원될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동행동을 통해 처리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데나 한나(근남) 박근혜 부총재가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어서 여야 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각 당 내부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대표들이 24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언타기자 uti@kdaily.com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백지화 촉구

이러 "기념관 건립은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상암동 부지를 기증하는 등 국민 의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기념관 대신 초대 이승만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전시하는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건립해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교유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해 서울시의 청와대, 중앙의 방곡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중진인사나 원로들을 참여시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어나갈 방침이다.

●송환수기자 onekor@kdaily.com

"국민 대다수가 반대 건립엔 국론분열 초래"

경실련,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리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논쟁이 이적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엔 잘잘못 모두 기록해야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반대는 그동안 여러차례 시민단체나 개인이 주장했음에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이에 한미디 제안한다.

기념관이란 어떠한 뜻깊은 사적이나 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나 유품들을 진열하기 위한 건물이다. 그 내용에는 당시자의 일생에서 잘한 것과 잘못된 일을 역사적 관점에서 한점 빠뜨림 없이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는 주축에서 잘 알아서 기록하겠지만, 잘못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해 역사적 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다.

열렬한 친일분자였고 민족반역자로서 항일부대 토벌작전에도 참가했던 사실 등 그가 행했던 우리 민족에 대한 모든 잘잘못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기념관으로서 제구실을 할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서울 동작구 사당1동

《이후락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는 진짜 박정희 비자금?》

추적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

최근 박정희시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거액 부정축재로 감옥에 갔고 현직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현철 역시 거액의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마디로 부패공화국의 연속이었다.

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측면의 일부는 그의 청렴함이다. 서민적인 풍모 외에 개인과 친인척간에 비리가 없는 그의 행적은 부패시대에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박정희시대 그가 축적한 정치비자금을 놓고 그의 청렴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그 비자금의 상당부분이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에 있었다는 주장은 박정희 개인은 물론 그 시대를 다시 평가해야 할 만큼 충격적이다. 박정희 정치비자금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의 시대를 다시 조명해본다.

박정희 비자금은 있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은행에 남아있다는 '설'은 전·노 두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밝혀지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위스 은행은 국제적으로 독재자나 대자본가들의 '검은 돈'이 숨어드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 역대 권력자, 혹은 권력자의 언저리에 있던 유력인사 가운데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다. 70년대말 미국으로 망명한후 지금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그는 미국과 유럽을 떠돌며 엄청나게 사치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의회를 상대로 한 한국정부의 로비스캔들인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미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망명당시 그의 재산은 미국내 2천만 달러, 미국을 제외한 제3국에 6백만 달러 가량이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노름으로 날린 돈만 7억1천4백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제3국에 있는 그의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이 돈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실제 그가 79년 파리에서 실종되자 프랑스로 경찰은 스위스경찰에 소재과약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가 스위스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 취리히를 향해 떠났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 26사건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친 뒤 그가 통치기간에 거액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왔다는 '설'이 대두됐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대통령을 대신해 돈을 관

리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지난 95년 미국은 박정희의 비자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비밀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의 부패문제'라는 제목의 63년 2월 20일자 이 보고서는 당시 미대사관의 필립 하비부 정무참사관이 작성했다. 그 내용중에는 63년 박정희 정권의 부패상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내막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군사정권이 스케일이 큰 공작을 통해 비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62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주가파동은 중앙정보부의 부추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주가파동으로 "중정 및 이에 연계된 측이 챙긴 이득은 최소한 40억환(약 3천만달러)에서 많게는 60억환(약 4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패의 부활'이란 항목에서 "군사혁명이 난 후 몇 달간은 경제계의 부패가 급격히 없어지긴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행태가 점차 부활됐다"면서 "(군사정권에 의해 폐쇄됐던) 요정들이 (다시) 문을 열고 군정과 중정 인사들을 최고의 단골로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거래에 뒷돈이 건네진 의혹이 있다면서 한국·프랑스·이탈리아 어선협정(Fishing Boat Agreement)과 태창섬유 매각건을 예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중정이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하는 한편 비밀공작을 수행해왔다"며 "증권파동·새나라자동차·워킹힐 건설에 중정이 간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새나라자동차와 관련 중정은 처음에 택시 2백50대를 일본으로부터 특혜 수입했는데 이들 택시는 한달에 12만달러 상당을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박정희정권은 3공에서 4공을 거쳐 유신말기로 가면서 권력에 의한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여기서 생긴 막대한 돈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박정희 비자금도 그중의 일부분이었다. 이러한 박정희 비자금을 처음 대외적으로 폭로한 것은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들인 이동훈씨였다.

이후락 아들 박정희 비자금 공개

1973년 8월 8일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난 뒤 냉각된 한·일관계는 한국측의 사과로 마무리 됐지만 국내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사건을 접한 박정희는 격노하여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을 갈아치우려고 했지만 '이후락 부장의 해임이 김대중 납치사건을 중앙정보부에서 벌인 것으로 인정되는 꼴이 된다'는 김종필 총리의 만류로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락은 중정요원들이 김종필 친척을 폭행한 사실을 끝까지 박대통령에게 숨겼다가 73년 12월 3일 사표를 내고야 말았다.

박정희의 추가제재에 겁이 난 이후락은 같은 해 12월 19일 콧수염을 달고 변장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홍콩을 거쳐 영국에 도착한 이후락은 미국에 입국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해 서인도제도 영국령인 바하마로 건너갔다.

박정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후락이 국외에 있는게 마음에 걸리고 두렵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조선일보사장 방일영과 한국화약사장 김종회를 바하마로 보내 이후락의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후락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를 들은 박정희는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재산몰수는 물론 모든 부정을 공개하고 처자식들도 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의심많은 이후락은 자기 아들 이동훈을 시켜 서너번씩이나 사신(私信)을 갖고 박정희에게 왕래케 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박정희의 자필 친서를 받고 나서야 74년 2월27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을 떠난 지 70일만의 일이었다.

그러면 박정희의 분노를 잠재운 이후락 사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박정희에게 용서를 비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도 어쩔 수 없게 만든 그 무엇, 바로 이후락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있는 박정희의 비자금때문이었다.

일찍이 김형욱은 그의 회고록에서 박정희가 엄청난 규모의 정치비자금을 모았고 그중 상당부분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아버지의 사신을 박정희에게 직접 전한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은 미 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를 증언했다.

이와 관련 월간 '말'지(8월호)는 재미언론인 문명자(67·U. S Asian News 주필)씨의 글을 통해 이동훈의 증언과 박정희 비자금의 내막을 밝히고 있다. 이동훈은 한국의 대미 로비사건인 '박동선 사건' 이른바 '코리아게이트'에 연루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프레이저위원회) 청문회에 섰다.

박동선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조사하던 프레이저위원회는 박정희의 비밀자금 조사를 위해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 이동훈을 몇 차례나 소환했다. 78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이씨는 계속 피해다니다가 결국 소재지가 발각돼 청문회 증언석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비밀증언 형식으로 청문회에 섰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의 증언전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동훈은 프레이저위원회에서 "비록 아버지가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을 관리했지만 그것은 그의 돈이 아니라 정부자금"이라고 증언했다. 이동훈은 또 "아버지가 일본에서 2백만불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김형욱도 이보다 앞서 열린 프레이저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청와대 금고에서 꺼낸 자금을 받은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문명자씨는 이동훈의 증언 외에도 스위스 은행의 기록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박정희 비자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자금 어떻게 조성되었나

그러면 박정희는 왜 비자금이 필요했고 그것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김형욱의 회고록과 한국기자협회 편집실장을 역임한 이상우(李祥雨)씨의 '박정희시대' 등에 자세히 언급돼 있

다. 문명자씨는 이동훈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그 실체를 좀 더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동훈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과 매수된 야당인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곤 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위원회 행정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때때로 정부를 대표해서 활동했던 한 한국사업가는 "(유신 다음 해인) 73년에는 국회의 야당의원 대부분이 박정희의 돈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군부의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0년 초기에 주요 군지휘관들에게 매우 관대한 개인적인 도움과 자금을 주었다"고 말했다.

박정희정권의 정치자금 축적은 주로 일본과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는 크게 경협자금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부정행위, 한국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커미션 내지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협자금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지난 66년 5월에 있었던 삼성재벌산하 한국비료의 밀수사건이다. 삼성은 일본의 미쓰이(三井)물산으로부터 4천3백90만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와 울산에 3만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건설을 착수했다. 그러나 삼성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장건설자재를 가장해 사카린원료 2천4백부대(시가 5천만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팔려다 적발됐다. 위 상업차관 중 일정부분은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밖에도 부산페리의 취항, 포항제철건설, 화력발전플랜트 도입, 서울지하철 전동차 도입 등에서 일정비율의 자금이 공화당 몫이었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지난 71년 4월 지하철 전동차를 한국에 팔았던 4개 일본의 무역회사는 미국의 은행구좌에 1백20만불을 이체했다. 이중 일부 혹은 전액이 공화당의 선거자금으로 이용됐다.

미국 기업체 또한 공화당의 정치자금 모금에 이용되었다. 이 경우의 대상은 주로 합작기업체이고, 선거때에 곧잘 이용되었다. 울산정유공장과 대한석유공사에 투자하고 있던 걸프회사는 지난 66년 7대 국회의원 선거때 1백만달러의 정치헌금을 종용받았다. 4년 후인 70년 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1천만달러의 헌금을 다시 요구받았다. 돈액수에 놀란 걸프측의 도오시 사장은 직접 서울로 날아와 흥정을 벌였고 결국 3백만달러를 내놓았다.

같은 정유사인 칼텍스도 서정기사장을 통해 1백만달러를 제공했다. 서정기는 호남정유측의 현금 유출입 문제로 인해 칼텍스로부터 그 자금을 한국 바깥으로 옮겨 달러화로 바꿔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칼텍스측에게 1백만달러를 스위스은행구좌에 이체시키라고 했다. 은행구좌는 서정기 및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파나마에 등록된 아이사 무역사 명의였다.

칼텍스는 71년 3월 15일 그 돈을 이체시켰다. 그런데 서정기가 스위스은행에 돈을 보내도록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69년 9월, 걸프석유사가 2백만달러에 상당하는 서정기 소유기업 주식을 구입하고 그 금액중 20만달러를 스위스은행 구좌에 서정기 이름으로 이체시켰다. 그 과정에서 서 사장 입회하에 이후락이 은행카드에 서명했고 그 거래내용은 이후락의 사위인 정화섭(중앙정보부 해외담당 2국장)에게 보내졌다. 프레이저 소위원회에서 이동훈은 '정화섭이 이후락의 돈을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는 김성곤 등 공화당 4인방에 의해 정치현금이 모아졌다. 그 방법은 차관·융자·건설·특혜적인 수입권 등에 대한 리베이트나 커미션 등이었다. 그리고 4인방체제가 몰락한 72년 이후에는 박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을 관장했고 창구도 청와대로 단일화했다.

이동훈은 "73년 아버지가 실각한 후 권력이 청와대 경호실의 박종규에게 옮겨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74년 8월 영부인이 암살당한 후 박종규는 사임했다. 75년 후반 김성곤의 죽음, 김종필 총리 경질로 이전 15년간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액 중 그 누구도 정부내의 공적 지위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동훈은 "아버지가 74년 2월 귀국한 후 한번도 박정희를 만나지 못했다"고 소위원회에서 밝혔다. 한 한국사업가도 이 시기를 요약해 "권력과 부패의 자주적인 힘들이 청와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행정부서 관료는 "78년까지 한국 정부정책 결정의 유일한 해답은 박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이 직접 정치자금을 관장하면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도 그 이전과는 달리 홍정이 배제되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돈이 염출되었다. 기업들은 선거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알아서 스스로 헌금했다. 이렇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조달된 정치자금은 박대통령의 직접 관장하에 선거자금과 공화당의 경상적인 지출, 소속 의원에 대한 지원금, 특정인사들에 대한 용돈, 그리고 대야공작금 등으로 쓰여졌다.

다른 색깔의 대통령 비자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퇴임할 때 쓰다남은 정치자금이 각각 2천여억원씩 있었다는 사실이 그후의 재판에서 판명됐다. 특히 두사람은 업자를 직접 만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그의 유럽에서의 행적과 딸 소영양의 외화도파 등으로 스위스 은행에 비밀구좌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의 경우 2천만달러에 해당하는 비자금이 재미동포 사업가이며 김대통령의 미국내 핵심인맥인 이우성씨를 통해 관리돼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대통령을 비롯 전·노 대통령은 모두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모금과정과 활용 용도는 사뭇 달랐다.

(1997년 8월 7일, "코리아 포스트"지, '추적 박정희 비자금의 실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도 박정희만은 안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렬씨의 말대로 대통령 박정희가 한여름에도 집무실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았고, 파리채로 손수 파리를 잡았으며 구멍난 러닝 셔츠를 마다 않고 입었던 사람이라 치자. 과연 그것이 그의 진면목이었는가. 그렇다면 그의 18년 통치는 간디사상과 같은 고귀한 정신철학에 입각한 철인정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침실 변기에 벽돌을 집어넣어 한방울의 물까지도 아끼려 했다는 박정희가 스위스은행에 비밀구좌를 만들어 거액의 외화를 예치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박정희 자신이 온갖 특혜를 퍼부어 육성한 재벌들에게서 뜯어 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가. 아울러 수도꼭지까지 금으로 된 안가에 못 여성들을 불러들여 방종한 생활을 일삼은 그의 행적과 '청와대 변기의 물 한 방울 아끼기'는 어떻게 비교·해석돼야 하는가.

그의 18년 독재체제가 남긴 가장 큰 문제는 4·19이후 한국민들이 씨 뿌리고 키워 가던 민주주의의 싹을 근원부터 잘라 버린 일이다. 그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후 이 나라에서는 오직 그의 말과 뜻만이 법인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을 지원했다 해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그가 취조중 변소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시신을 끝내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만큼 최 교수에게 가해진 고문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거나 그의 죽음에 밝히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박정권은 또 64년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 하여 41명의 지식인들을 구속해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란 이름하에 무리하게 기소하려다가 일선 담당 검사들의 사표파동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박정권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74년 다시 국가 전복 혐의로 잡아 넣었고, 불과 반년 후인 이듬해 4월 이들 중 8명을 전격 처형했다. 격화되고 있는 민중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75년 8월 17일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사한 장준하 씨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가 나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도 박정희만은 안된다."고 역설하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광복군 간부로 일제에 저항하던 장준하로서는 관동군 중위로 독립투사들을 잡으러 다니던 박정희가 해방 조국의 대통령으로 행세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기야 박정희는 호남이라는 희생양을 동원했다. 국민 전체가 호남과 반호남으로 나뉘어 대립 갈등하게 만든 그의 분할통치전략이 장기집권에는 주효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지역주의라는 민주주의 최대의 장벽을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고 말았다.

이 같은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미국 조야에 빗발치자 박정희는 70년대 초부터 워싱턴 정가에 거액의 달러를 뿌리기 시작했다. 김동조 주미대사는 현직 대사의 신분임에도 의회를 돌면서 거액의 돈봉투로 미국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려다 말썽을 일으켰다. 박정희가 기용한 '대미 로비

스트' 박동선 역시 로비를 한다며 의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뿌렸다가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피했다. 김한조 사건 역시 미국 국회의원 매수작전의 일환이었다.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씨도 중앙정보부 돈으로 워싱턴에 한국문제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미국 학계와 언론계에 친박정희 여론을 조성하려고 활동하다가 FBI로부터 강제 소환장을 받자 가족을 놔두고 자기 혼자 손가방 하나만 들고 한국으로 도망갔다.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국익보다는 박정희 개인 찬양과 정권연장에 힘썼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국정부로부터 60만 달러를 받아 자신이 챙기고는, 펀돈으로 국회의원을 매수해 국회 의사록 한 귀퉁이에 박정희를 찬양하는 발언을 올리게 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기록을 가져다가 박정희에게 보이고 대단한 공을 세운 양 과시한 자도 있었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14-16쪽)

일본 육사 교장, 방일한 박정희에게 “너 출세했구나”

지난 72년 나는 도쿄에서 박정희의 만주 신경군관학교 동창생 두명이 도쿄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그들을 만난 일이 있다. 만주군관학교 시절 박정희의 창씨명은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그 곳을 졸업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했을 때 박정희는 창씨명을 완전히 일본사람 이름같이 보이는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로 바꾼다. 어렵사리 만난 박정희의 두 동창생은 만군시절의 박정희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요시(좋다)! 토벌이다!' 하고 벽력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 일본생도들은 '저거 좀 돈 놈 아닌가' 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들은 “박정희가 '벚꽃처럼 활짝 폼다가 한 순간에 떨어지겠다'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는 증언도 했다. 나는 그들로부터 박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어렵사리 입수했다. ……(중략)

5·16쿠데타 후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61년 11월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이케다 수상과 회담했다. 일본측은 수상관저에서 박 의장을 위한 카테일 파티를 열어 주면서 박정희의 일본 육사 시절 교장을 불러다 놓았다. 이 일본인 교장은 반말 비슷한 어조로 박정희에게 “너 성공했구나”라고 해 박정희가 숙소로 돌아와 몹시 투덜뎠다고 한다.

이 얼마나 교활한 일본인들인가. 미래의 한국 대통령 박정희에게 “어차피 너는 우리가 키워 낸 용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66-69쪽)

청와대 침실 변기에 벽돌을 집어넣어 한방울의 물까지도 아끼려 했다는 박정희가 스위스은행에 비밀구좌를 만들어 거액의 외화를 예치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 돈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가.

유신체제하에서 아무도 그 비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던 77년에 미 하원 국제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세칭 프레이저위원회)는 '코리아게이트'(박동선이 벌인 미 의회 의원 뇌물 로비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프레이저위원회를 비롯한 미국 상·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의해 박정희의 비자금 전모는 낱알이 드러났다.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차지하는 지위는 별개라 하더라도, 적어도 70년대 후반 미 의회의 코리아 게이트 조사위원회들은 한국 국민을 위한 중앙정보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할 만하다.

수많은 증인들이 프레이저위원회 청문회 증언대에 섰다. 그 중에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아들 이동훈, 사위 정화섭,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주미대사관 중앙정보부 참서관 김상근, 박정희가 기용한 로비스트 박동선·김한조, 국제 석유재벌 걸프, 칼텍스, 유니언 오일사 대표 등 박정희의 비자금 조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나는 미 의회의 2년에 걸친 코리아게이트 조사 과정 내내 그것을 취재했다. 전두환·노태우 일당이 주무른 4천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에 이미 혼이 빠진 한국 국민들에게는 박정희의 '몇 억 불' 규모의 정치자금쯤이야 펀돈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우리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이 불과 3억 불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당시 박정희가 주무른 몇억 불 정치자금의 가치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쌀 한 말도 들여놓을 목돈이 없어 한 되 두되씩 봉지쌀을 사다 먹던 시절이 아닌가.

“박정희는 청렴했다”고 외치는 90년대의 박정희신화 제조자들 앞에 나는 그 때의 취재수첩을 펼쳐보이고자 한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210-211쪽)

김성곤·이후락·김형욱 3인이 나눠 맡은 정치자금 조달체계

(……중략) 청와대의 한 고위관리는 한국을 방문한 한 프레이저위원회 조사위원과의 인터뷰에서 “70년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각각 1억 불 이상을 축재했다”고 증언했다. 훗날 김형욱은 프레이저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김성곤이 모금한 정치자금중에서 75만불을 내가 개인 용도로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성곤이 박대통령, 육 여사, 정일권, 이후락, 박종규에게도 그런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후락이 모금한 자금은 대통령 개인 용도로 스위스은행 비밀구좌에 예치되었다. 이후락 외에

다른 측근들도 대통령에게 돈을 제공했다. 박정희는 그 돈의 일부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의 금고에 보관했다.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프레이저위원회가 찾아낸 은행기록과 이동훈(이후락의 아들)의 청문회 증언, 청와대 고위 측근의 증언들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동훈은 프레이저위원회 증언에서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을 비록 아버지(이후락)가 관리했지만, 그 돈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고 박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한 정부자금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훈은 "나도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일본 은행에 2백만 불을 예치했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박정희는 이 같은 비밀구좌가 필요했던 것일까.

이동훈은 "박 대통령은 여당 인사들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했다.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미국 행정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한 유력 기업가에 따르면 70년 당시, 거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박정희의 돈을 받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동훈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그는 또한 "70년대 초반 박 대통령은 군부의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도 상당한 자금과 혜택을 주었다"고 했다.

박정희가 3선을 위해 출마한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더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70년 6월 박정희는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에 10만 불씩을 기부할 수 있는 기업체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김성곤이 작성한 명단에는 럭키그룹, 현대건설, 삼성그룹과 김성곤의 쌍용그룹 등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업 대표들 중 다수가 5·16 직후 부정축재자로 기소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외국 기업들 역시 71년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 조달에 이용되었다. 예컨대 걸프 사는 공화당에 1천만 불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3백만 불을 제공했다. 같은 석유재벌 칼텍스 사도 최소한 1백만 불을 제공했다. 미 행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한 미국 기업도 이후락의 강요에 못 이겨 자사의 한국 대리인을 통해 청와대에 커미션으로 수백만 불을 제공했다고 한다. 그 중 1백만 불은 71년 선거이전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해외계좌에 지불되었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216-217쪽)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 "스위스은행 비밀구좌는 박정희 것"

한국정부가 기용한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뿌린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미 의회 외교위원회 국제관계소위원회(일명 프레이저위원회)는 박동선이 뿌린 박정희 비자금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둘째 아들 이동훈을 몇차례 소환했다. 78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이 씨는 계속 피해다니다 결국 소재지가 발각돼 비밀 증언 형식으로 청문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증언대에서 "내 아버지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는 박정희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박정희 비밀구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도대체 이동훈이 왜 입을 열었을까"라고 궁금해 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한보청문회에 출두한 정태수 회장처럼 '자물쇠 입'이나 '실어증'으로 버티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일 텐데, 그것은 완전히 한국식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이동훈의 소재를 FBI를 통해 파악한 프레이저위원회는 그에게 소피나(강제소환장)를 발부했다. 소피나를 받고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FBI에 의해 강제 구인당한다. 프레이저위원회는 그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비밀증언'이란 타협책을 제시했다. 미 의회의 조사활동 목표가 박 정권의 비밀자금으로 미국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려 한 한국인들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의원들을 밝혀 내 처벌하고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동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프레이저청문회의 비밀증언대에 선 것이다.

그런데 일단 증언대에 선 이동훈은 결코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다. 프레이저청문회의 조사반들은 이미 이후락 일가가 박정희 정권의 비밀자금을 조성하고 비축하고 유통시킨 과정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증거자료들은 CIA, FBI, 법무성, 국세청, 국무성의 회계전문가들이 미국 내는 물론 스위스·바하마·도쿄 등 전 세계의 박 정권 비자금 거래 은행들의 거래기록을 뒤져 확보한 것이었다.

이럴테면 걸프가 스위스은행의 이후락의 비밀구좌에 입금시킨 돈의 내역을 은행측이 이후락의 사위 정화섭에게 통보한 명세서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명백한 자료 증거를 들이대며 심문하는 특별검사들의 칼날 같은 질문 앞에서 이동훈이 무슨 수로 비밀구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또 이동훈은 "일본 모 은행의,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좌에 예치돼 있는 2백만 불은 누구 돈이냐"는 추궁에 "그 돈은 아버지(이후락)로부터 받았지만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것"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미국 최고의 일류 변호사까지 동원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끝내 사실을 부인했다가는 위증죄로 법정에서 서는 일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231-232쪽)

75년은 미국내에서 한국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미 의회에서 줄줄이 폭로되던 해였다. 75년 6월 상원 국제관계소위원회 산하 '다국적기업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걸프사 사장은 "한국정부의 압력으로 67년에 1백만 달러, 71년에 3백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6월 10일에는 73년 망명한 전 주미대사관 공보관장 이재현이 '인권문제 청문회'에서 "한국 중앙정보부가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매수하려 했으며 김동조 주미대사가 의회를 방문하기 전에 1백 달러짜리 지폐들을 봉투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어의 박정희지지 발언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251쪽)

“아니 남 장관님. 한국에 고구마가 없어요?”

72년 이후락의 요구에 따라 대한농산 사장은 박동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워싱턴 은행에 구좌를 만들었다. 이 구좌를 통해 박동선이 받은 커미션 중 1백70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가 한국 중정으로 흘러들어갔다.

박동선이 미국 쌀 수입 독점권을 얻은 것은 쌀 수입에서 떨어지는 커미션으로 대미 로비를 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프레이저위원회에 따르면, 박은 69년 이후 8년 동안 한국의 쌀 수입 증가상을 하면서 미국의 쌀장사들로부터 9백 20만여 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받았다. 문제는 박이 이 돈 중 과연 얼마를 소위 ‘애국사업’ 즉 대미 로비에 사용했는가이다. 미국 법무성과 의회의 조사 결과, 박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액수는 위 커미션의 8% 쯤에 불과한 75만 달러 정도였다.

이 같은 박정희·박동선의 부도덕한 대미 로비에 인한 한국 국민이 입은 피해는 미국의 형편없는 3등급 쌀을 비싼 값에 사먹어야 했던 것만이 아니다. 박동선은 캘리포니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텍사스·아칸소 등 쌀을 팔아야만 정치생명이 유지되는 쌀 생산 주 출신 의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쌀 뿐 아니라 그들의 출신주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작물까지 사들이도록 했다. 그로 인해 한국 농민들이 입은 피해상이 어떠했는지는 오늘의 한국 농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오토 패스만 하원 세출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조선호텔에서 리셉션이 있었다. 마침 서울에 와 있던 나도 리셉션에 참석했는데 잠시 로비로 나갔다가 우연히 패스만이 루이지애나에 전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 패스만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떠들고 있었다.

“나 패스만이요. 우리 양(고구마와 비슷한 작물)을 한국에서 사주기로 했습니다. 방금 이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하하하...”

나는 기가 막혔다.

잠시 후 남덕우 장관이 보이기에 그에게 따졌다.

“아니 남 장관님. 한국에 고구마가 없어요? 뭇 때문에 루이지애나 양을 한국에서 사 줍니까?”
게다가 박 정권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매춘여성들을 대주 기 일쑤였다. 더구나 그들은 유엔외교를 위해서라면 미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각종 인종들을 한국에 불러들여 이런 짓을 했다. 나는 조선호텔의 한 여종업원으로부터 미국 국회의원과 동침하던 한 한국 여자가 한밤중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하고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 나왔다는 소리까지 들은 일이 있다.

박동선은 코리아게이트 조사를 위한 프레이저청문회에 나왔을 때 나와 부딪히자 “같은 한국 사람끼리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했다. 증언에 나선 그는 시종일관 국가와 민족을 내세우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공산화되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자신의 사기 행각을 변명하고 오히려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과연 그는 영웅인가.

77년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박동선이 했던 증언이 기억난다.

“로이벨 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에게 1천 불을 주었다. 내가 주고 싶어 준 것이 아니라 패스만 의원이 주라 해서 로이벨이 그의 방에 왔을 때 현금으로 줬다.”

미국 쌀 수입 커미션으로 무려 9백20여만 불을 중간에서 가로챈 주체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오만불손한 태도였다. 취재하던 미국 기자들은 “기껏 1천 불 받은 현직 국회의원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무려 9백만 불을 중간에서 뜯어먹어 한국민 전체에게 비싼 쌀을 먹게 한 박동선은 미국과 한국에서 영웅같이 행세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그런데 더욱 한심했던 것은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 언론 주미 특파원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프레이저위원회의 자위스키 수석 조사관이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때의 영웅심으로 세칭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로 일관해 박동선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그르쳐 놓았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261-263쪽)

박정희교 신도들이 펼치는 논리를 보면 오로지 박정희를 미화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도 원칙도 없다.

사실 박정희는 김동조 주미대사가 의회를, 박동선이 민주당을, 김한조가 공화당을 맡아 돈봉투로 로비를 한다니까 상당히 안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추종자들의 주장대로 그가 자신의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 했다면 박정희는 닉슨은 물론 카터 행정부가 어떤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했다.

닉슨 행정부 당시 월남전이란 수렁에 빠져 있던 미국이 염려한 것은 박정희의 장기독재와 인권 유린·부정부패였다. 만일 이에 항거해 한국민들이 봉기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혹은 내부 저항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박 정권이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식으로 국지전이라도 일으킨다면 주한미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내전에 휘말리게 되고, 그것은 제 2의 월남과 같은 쓰레기통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가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자 했다면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나 한국에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했다.

그러나 온 세계가 냉전에서 벗어나 데탕트로 나아가고, 진보주의의 흐름에 합류하던 시기에 박정희 홀로 유신체제라는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했고, 온 세계가 군축으로 가던 시기에 홀로 자국 국방의 깃발을 들고 군비확장 노선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주미대사는 물론 박동선·김한조 같은 사

기꾼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이를 비판하는 미국 의회를 매수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고자 했다.

최근 「월간조선」 조갑제로 대표되는 박정희교 신도들은 '미국과 맞선 박정희의 민족주의'라는 미화 논리를 새로 개발한 듯하다. 이야말로 도대체 형평성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비이성적인 얘기다. 박정희가 핵 개발로 미국에 맞서다 희생된 민족주의자라면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김일성은 어떤가? 또 인공위성 발사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김정일은?

그토록 민족주의자라는 박정희는 왜 자신이 직접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저지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대미 로비를 진두 지휘했던 것일까. 박정희의 자주국방 옹호론자들은 이 점을 설명해야 한다.

박정희가 대미 로비에 나선 발단은 주한미군 철수 저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옹호해 줄 미국 국회의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을 매수해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 했다. 그러나 민중의 저항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보장해 주지 않자 그는 도리없이 미국에 맞서기 시작했고 핵 개발을 강행한 것이다.

박정희교 신도들이 펼치는 논리를 보면 오로지 박을 미화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도 원칙도 없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허점이다.

박정희가 워싱턴 정가에 뿌린 돈, 그리고 그를 등쳐먹은 김한조, 박동선이 워싱턴의 금발 미녀들에게 뿌린 돈들은, 저녁밥을 짓기 위해 국제유가보다 30%나 비싼 석유 한 통을 사려고 달동네의 산비탈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했던 한국 여인네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가고 있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320-322쪽)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폭로하면... 나의 한국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명자 기자에게

오래된 주 변두리에 있는 나의 목장을 한 친구가 사겠다고 해서 그 목장의 장비목록을 정리하고 소 마리 수를 헤아리느라 두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는 우편을 포함해서 외부 접촉을 하기가 어려워 63년 8월 27일자 귀하의 서신에 대한 회답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해 귀하가 원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미국에 돌아와 있어 안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폭로하면 정부가 법을 제멋대로 좌우하는 한국에 남아 있는 나의 한국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내가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1. 공산권 제도를 모방해서 정부기구를 개조한 박 정권의 행태에 대한 논평 및 2. 박정희와 그의 동료 일부가 공산주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 또 그들이 현재도 공산주의자이며 공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현 정권의 구조는 전부 공산국의 행정구조에 따라 조직되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행정기구의 개편 결과 61년 5월 이후 한국의 각 부처와 군에는 지휘계통과 관계없이 군사위원장(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할 자격을 가진 자가 한 두 명씩 끼어 있습니다. 공산권 통제기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중 명령계통은 사실상 정치위원 제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계통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예로서 국립경찰 경감과 총경 자리에 위관급 장교들을 대거 부임시켰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상관이 군사위원장에게 불리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사위원장이나 그의 측근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중앙정보부 조사부에 근무하는 이상태 중령이 또 다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3년 3월에서 4월까지 본인이 중앙정보부 조사부에 체포, 구속되어 있는 동안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후임인 김재춘 부장은 중앙정보부 숙정이란 명목으로 인사개혁을 했습니다. 이 중령은 그 때 김재춘 부장이 데리고 온 다섯명의 상급자 밑에 있었지만 사실상 조사부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박정희 의장과 직접 연락할 수 있었으며 그 때 일어난 중앙정보부의 대전환 속에서도 그런 위치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몇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5·16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이하 군사위원회)가 처음 결성됐을 때 그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일한 조직 같았으나 실제로는 여러 그룹을 대표한 것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토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위원회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비밀계획에 따라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금년(63년) 2월, 박은 김윤근 소장과 동료들을 군사위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게다가 김종필이 갑자기 국외로 나가게 됨에 따라 군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박정희의 노골적인 1인 독재를 위장하는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미국 대사 사무엘 D 버거는 '군사정부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김종필이 군사위원회 내의 반대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수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가 대규모의 증권파동을 대담하게 일으키고 박정희가 행한 화폐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밝혀지자 버거 대사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화폐개혁은 사회주의로 가는 장기계획의 첫 조처임이 명백했습니다. 침략적인 공산국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에서 그런

조처는 한국을 급속히 공산화시키는 수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박정희와 김종필이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군사위원회로부터 축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미국 대사가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에 반대했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던 것입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득세한 후 한국에는 수많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민은 박정희와 밀접한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2년전에 북한에서 장관급 공산주의자가 남하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파업 담당자, 연락원, 정치 선동가 등등 여러 가지 임무를 띤 북한 첩자가 한국에 침투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이북 첩자들은 대부분 이남에 사는 친척이나 친지와 먼저 접촉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고민하다가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그들을 고발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전 이후 북한이 각료급 공산주의자를 남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61년 9월 얼마전까지 이북에서 차관으로 일했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친구였던 사람이 서울에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황태성입니다.

그가 온 다음 두 달 동안 박정희와 황태성은 반도호텔에서 적어도 세 번 만났습니다. 602호실은 한국 중앙정보부가 그 방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24시간 감시하는 장소였습니다. 본인은 이 세 번 모임에서 그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박정희는 다른 '애국적인 한국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황을 투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61년 10월 경찰에서 황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사실을 발표하기도 전에 중앙정보부가 황을 가로채 가지고 비밀리에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황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62년 5월 이남의 공산주의 죄수들은 모두 대구형무소로 집결되었는데 이 중 황태성만은 62년 7월 말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현재 황은 서대문 형무소 귀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처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다고 봅니다.

3. 한국 중앙정보부는 대공 정보활동보다는 국내 정치사찰 부문에서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중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자금을 조달하는지 밝혀 줄 수 있는가.

: 중앙정보부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지향인사들과 친미 인사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오랫동안 산 미국인으로서 CIA가 이 부패하고 악질적인 야수를 열렬히 지지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CIA는 남베트남에서 부패한 고 딘 누 비밀경찰과 특별부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에서 CIA의 사업방향을 돌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정보부는 예산만 가지고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금 출처를 마련하고 있는데 자유당 추종자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능률적 방식으로 자금을 염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미국 대사와 전 미8군사령관 멜로이 장군의 협력을 얻어 미군 잉여 자재판매업을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미군 쓰레기 처분까지 맡고 있습니다. 미군 택시 운영권도 아무런 경쟁입찰도 없이 따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버거 대사와 멜로이 장군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62년 6월 미국 대사가 현실에 눈을 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중앙정보부는 김종필의 형 김종락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 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거나 한국에 투자할 일본인들로부터 자금을 짜내는 것입니다. 김종락은 새나라 자동차 공장과 의암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자금을 염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증권파동은 주로 한국 중앙정보부 자금 조달을 위해 생긴 사건임은 물론입니다. 이런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현재도 증권시장을 이용해서 중앙정보부와 간부들의 개인 처부를 위해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4. 귀하는 군사정권에게 체포된 다음 사실상 한국에서 추방되었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 한국에서 내가 추방된 이유에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추방은 나에게도 고역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실상 망명객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박정희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봅니다.

체포됐을 때 나는 한미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보장된 바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나의 한국친구들에게는 그런 특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공개재판에서는 저명한 한국인들이 당한 것과 같은 부정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 정권은 공개재판을 하지 않고 나를 추방한 것입니다.

5. 귀하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가. 앞으로 사정이 허락한다면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는가.

: 나는 한국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정치에 개입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미국인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유로운 한국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래리 베이커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 1999, 48-52쪽)

'역사 거꾸로 세우기'

(...중략)그래선지 박정희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신문의 기사는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원 5백 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역대 대통령중 인기 1위가 5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정희였다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사회 일각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5·16쿠데타와 소위 '개발독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노출시킨 조사였다. 그것이 왜 잘못된 인식인가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되짚어 볼 때도 됐다.

먼저 61년 5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날은 장면(張勉)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지은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이었다. 부정축재의 낙인이 찍혔던 업자들은 박정희쿠데타로 기사화됐고, 군사정권은 그 뒤 얼렁뚱땅 형식적 처벌로 때웠다.

5·16쿠데타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일국교 정상화에 있다. 이로써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제도화됐고, 박정희정권은 반일(反日)학생운동을 누르고 일본의 상업차관에 의한 초보적 공업화를 시작했다.

소위 '개발독재'의 내력은 그런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동북아를 무대로 하는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그 보상으로 떨어진 부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줄기찬 고도성장은 허리띠 졸라매고 뛰는 이 민족의 전통과 능력이 이룩한 기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개인의 역할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면, 과대포장도 삼갈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지기반이 없는 소수파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몰염치한 '파벌정치'에 의존했다. 영남파벌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식 군국주의를 모방한 유신쿠데타로 갔다.

그 유산은 지금도 이 나라의 모든 공적(公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권력에 기생하는 철새집단 겸 어룡집단이 정치와 국가조직의 주류를 이루고, 도덕의 규제를 벗어난 권력은 정경유착이 쏟아내는 돈벼락을 즐기고 있다. 한보가 바로 그 예다.

(미디어 오늘, 1997. 6. 18 정경희(언론인) 칼럼 '역사 거꾸로 세우기'중에서)

'대한민국 50대 인물'의 함정

외세가 밀려오는 19세기 후반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강경론자였던 유중교(1821~1893)는 "많고 적음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치 않는다"고 했다. 숫적으로 많다고 '옳은 것(正)'이 아니요, 적다고 '그른 것(邪)'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세가 기울어도 옳은 것은 여전히 옳고, 그른 것은 여전히 그른 것이다.

이것은 '다수결'을 거부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선거는 우민(愚民)정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여론조사는 조작된 정의(正義)가 아니면 우민의 정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정부수립 50주년기념 기획으로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50대 인물'을 발표했다(7월 15·16일자). 면접조사에 의한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했다.

원래 여론조사란 엄밀한 뜻에서 옳고 그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선일보가 한국갤럽과 공동조사했다는 이 '50대 인물'은 지나치게 특수한 일부의 의견과 인식을 반영했다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대중적 언론매체가 '국민'의 이름으로 내놓기에는 적절치 못했다.

우선 두드러지는 것이 '박정희'였다. 그는 분야별조사에서 '정치-군-법조'부문 1위였고, 전문야를 망라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박정희가 과연 '대한민국 50년을 만든 인물'로 김구(전체 2위)나 이승만(5위)을 앞지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밖에도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20대 인물'의 반열에 올랐다. 그 중에서 우선 박정희를 생각해 보자.

원래 5·16쿠데타는 대한민국내에서 일어난 정변이 아니라, '국제적 사건'이었다. 냉전시대 동북아 국제정치의 산물이다.

이 무렵 박정희를 내세운 쿠데타 움직임은 미국정부 고위층에서는 공개된 사실이었다. 아마 장면정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16쿠데타에 미국이 관련돼 있었음을 뜻한다. 이때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정책의 기초인 한·일협정타결이 무엇보다 급했다.

그러나 4·19이후 힘을 얻은 반일운동과 좌파운동에 직면한 장면내각이 미국의 시간표에 발을 맞추기는 힘들었다. 미국이 박정희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최우선적으로 한·일협정타결이고, 남북학생회담에서 기세를 올리려는 한국내 좌파운동의 봉쇄였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5월 16일이라는 날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날은 장면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이었다(97년 6월 18일자 '역사 거꾸로 세우기' 제하의 본란). 이날 장면정부가 무너짐으로써 자유당시절 정경유착 제1세대들은 기사화할 수 있었다.

그뒤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는 박정희 정권은 영남 소수파벌정치로 다수 국민을 통제하고, 그 보상으로 일본의 상업차관을 들여와 공장을 짓는 '정치적 반대급부'를 시작했다. 그것이 소위 '개발독재'의 진상이다.

그것이 성공해서 공업화의 성과를 거둔 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뛰어온 근면하고 잘 교육된 국민이 이룩한 업적이었다. 어느 모로 보나 박정희가 민족적 법통을 지켜온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나, 정부수립을 주도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앞질러 1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상식이다.

국민의 민주화여망과 헌법과 문민지배의 역사적전통을 유린하고 등장했던 박정희는 결국 유신쿠데타로 종말을 준비했다. 그가 1위에 올랐다니 어이없는 수수께끼다.

뿐만이 아니다. 전두환이 전체 9위이면서 김영삼이 30위권밖으로 밀려난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재벌을 대표하는 정주영(전체 4위)이나 이병철(8위)의 평가도 평균적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